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박연차 리스트’에 현 정권 실세들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 수십 명과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친 노무현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자 민주당 측에서는 “씨를 말리려는 거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한나라당도 추부길 구속으로 끝나겠느냐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검찰과 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구 곳곳에 썩은 물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는 자타가 공인하는 노무현 정부의 외
과 실제로 농협이 세종증권권을 인수하는 과정과
휴켄스 매각 과정에서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
에게 돈을 뿌린 혐의와 탈세 혐의로 지난해 말 구
속됐다. 이 사건에서 노무현 형 노건평도 거간꾼
노릇을 하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 돈
이 곳곳으로 흘러 들어갔음이 밝혀졌다.

전임 정부의 부패 스캔들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연차 리스트’에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검찰 고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검찰 수사도 잠잠해졌다.

그런데 4.29 재보선을 앞두고 다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광재 등 민주당 핵심 인물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해 촛불항쟁 모독(“사탄의 무리”)으로 쫓겨난 추부길도 이 추잡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정욱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송은복(전 김해시장) 등이 구속됐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종찬 등이 박연차 구명을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진술도 보도됐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상처를 입히려는 검찰의 표적 수사 가능성도 제기됐고 친 박근혜계 중진 의원들까지 겨냥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라는 얘기도 있다. 이런 비판을 면하려고 검찰이 끈 떨어진 현 정권 인사를 포함시켰다는 주장도 있고, 캐다 보니 고구마 줄기처럼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줄줄이 딸려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깃털과 꼬리

그러나 지난해 6월에 쫓겨난 추부길에게 7월 31일에서야 시작된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9월에 돈이 전달됐다면 그가 ‘몸통’이라는 말을 누가 믿을까? <동아일보>조차 “MB정권의 ‘썩은 사과’, 추부길 씨뿐일까” 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추부길이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한 ‘형님’ 이상득 연루설이 그래서 나온다.

검찰은 삼성 이근희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그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현 정권과 박연차의 검은 고리를 밝힐 키를 쥔 전 국제청장 한상률이 '홀연히' 출국했고 검찰은 이를 막지 '못' 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깃털’ 뽑고 ‘꼬리’ 자르는 수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할지도 모른다.

“집권 2년차는 부패가 고개를 드는 해”라고 <조선일보>가 경고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집권 1년차에도 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집권 후 내각이 출범하기도 전에 장관 3명이 표절·투기·부정부패 의혹으로 낙마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장 김귀환의 금품 살포, 이명박의 처사촌 김옥희가 벌인 공천 장사, 한나라당 삼십고문 유한열의 군납업체 로비 사건 등 끝도 없었다. 게다가 이명박은 지난해 8월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배임·횡령·탈세하고도 송방방이 처벌을 받은 재벌 총수 74명을 사면까지 해줬다. 삼성 이건희 비리 사건은 법정 선고 기한을 넘기며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검찰, 사법부가 앞장서서 부패 '규제 완화'에 나선 끝이니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사건의 당사자인 민주당에게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거대한 부패의 그물망을 뜯어버릴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경제 불황과 이명박 정부를 향해 쏠려있는 대중적 불만 때문에 이런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장호종 기자 | rednuc@left21.com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이명박 정부가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실제로 추가 지출되는 돈은 18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과 부유층·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 작성 당시 경제성장률 4퍼센트를 달성해야 한다며 법인세·상속세 등을 깎아 주는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심해져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세입이 줄어든 것이 분명해지자 적자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부자 감세 규모가 82조 5천억 원으로 매년 15조 원 이상이므로 이 감세안만 철회해도 추경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회 발행에만 매달리고 있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비판하지만, 이 감세안 통과를 묵인해 준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국채는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므로 부자들에게
대한 감세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6개월짜리

게다가 대규모 국제 발행을 계획하면서 국제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금리가 오를 것이다. 만약 국채가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매입해야 할 텐데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노동자·서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앞으로 경제가 더욱 나빠지면서 향후에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의 빚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등 부자 감세를 더 밀어붙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게다가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3조 5천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중 40만 개는 고작 6개월짜리 공공근로고, 나머지도 인턴교사와 공무원 인턴 등 단기·저질 일자리뿐이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은 1조 원이나 증액한 반면, 늘어난 복지 예산 대부분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이번 추경은 부자 감세와 건설자본과 부유층
 퍼 주기를 위한 추경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땀질식 추경예산으로 위기를 1~2년 버텨 보려 하지만, 부자 살리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일회적인 추경이 아니라 대기업·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전면적인 조세 개혁과 함께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해 노동자·서민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경제 위기 시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수퍼’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

강동훈 기자 | kdh@left21.com

국채 발행과 금리의 등락

예를 들어, '1년 후 10만 원을 지급할'이라고 쓴 국채를 정부가 9만 원에 판매하면 금리는 11.1퍼센트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 이 국채가 시중에서 8만 원에 거래되면 금리는 25퍼센트로 오르는 것이다. 대개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른다.

종합

세상은 요지경

“1방에 2명 사살” 팔레스타인 입산부 배에 저격용 총의 조준 십자선을 맞춘 이스라엘군 티셔츠

“(기차 말고) 차라리 낙하산을 타고 올 걸 그랬나” 철도노조의 출근 저지에 시달린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

“35세까지는 고생하는 건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삶 ... 전기세, 수도세, 사립대 등록금 등이 이렇게 썩 데가 어딴냐”, “반값 등록금 약속은 집권 전 이야기”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이 대학생 강연에서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선량한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격정을 했다. ...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전여옥

“한쪽 눈을 잃더라도 나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폭력과 투쟁해야 한다.” 전여옥 문병 간 황장엽

“전여옥이 액션 배우? 할머니가 무술 고수?” (시사IN)

“한나라당 Q 전 의원은 박(연차) 회장 집에 찾아가 ‘후원금 좀 달라’ 며 망치로 장룡을 내리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박 회장은 도끼를 가져와 장룡을 아예 산산조각 냈다.” (중앙일보)

“고대 출신은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 ... 현재 고대 출신 장관이 2명인데, 예전엔 5~6명씩은 됐다.” 전 고려대 총장 어윤대

“경찰은 ... 온 사회가 무어에 휘둘리고 엉뚱한 사람이 무머로 큰 상처를 입는 사태를 구경만 해서 도 안 된다.” 장자연 리스트를 우려하는 (조선일보)

“죽고 싶다. 죽는 게 행복하다. 살기 싫다. (이제) 중3인데 50년은 더 산 것 같다.” 입시 스트레스에 자살한 중3 학생

“안창호 선생은 이미 90년 전에 강과 산, 산림과 하천을 개조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부흥할 수 없다고 간파했다 ... 나는 요즘 사람들을 만날 때 수첩을 꺼내 이 부분을 읽어주고 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대운하’를 합리화하는 2MB

이명박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경제 위기 때문에 곳곳에서 분노가 북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저항들이 합쳐져 제 숨통을 조일까 봐 사람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3월 23일 서울경찰청장은 용산참사 추모대회에서 생긴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생긴 마찰을 빌미 삼아 ‘상습시위꾼’ 94명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 접속기록 1만5천 건을 분석해 “불법 집회를 조장하는 글의 조회전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며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것만으론 불안했는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뿌릴 수 있도록 방법 대원들에게까지 최루스프레이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경찰은 전여옥 ‘폭행’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동영상은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공개를 거부해놓고, 현장에 있었을 뿐인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을 구속했다. 조순덕 씨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진 출두까지 했는데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 이유로 들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 왕국의 계탈라들》 등을 불문서적으로 지정해 웃음거리가 됐던 국방부는 최근 이에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 두 명을 파면했다. “군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국방부에 지킬 위신과 품위가 과연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외피를 걸치는 것조차 거추장스러워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0일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정원을 21.2퍼센트 줄이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검찰은 공안3과를 4년 만에 부활시켰고, <PD수첩> 제작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의 역주행 속도전 때문에 전여옥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걸릴 지경이다. <경향신

문>이 실시한 여론조사(현대리서치)에서 국민 63.2퍼센트가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20~30대 70퍼센트가 대선을 다시 하면 이명박을 찍지 않겠다고 답했다.

온갖 오물을 튀기며 헛발질하는 이명박 불도저의 엔진은 꺼져야 한다.

김지윤 기자 | dejune@left21.com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21% 조직축소 방침을 최종 통보한 것에 반대에 노숙농성을 벌이던 활동가 2명이 24일 저녁 강제 연행됐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등록금 인하 행동 주도하는 한대련 이원기 의장 인터뷰

“민주노총과 연대해 싸울 계획입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4월 2일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도심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5조 원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10만 대학생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대련 이원기 의장[사진]은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동결했으니 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동결해도 휴학하는 학생들은 그대로 휴학하고 알바를 적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부산대에서 동결 이후에 설문조사를



한대련 이원기 의장

대학생 전체 등록금이 10조 원인데 5조 원을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한 거죠.

한 적이 있는데, 동결로는 안 된다 는 반응이 70퍼센트였어요.

“3월 추경예산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꼭 편성돼야 해요. 대학생 전체 등록금이 10조 원인데 5조 원을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한 거죠.”

얼마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비관 자살한 학생이 다녔던 고려대에서는 이월적립금 펀드 사용내역 공개·환수와 입시 의혹 해명 등을 요구하는 1차 행동의 날 집회에 1백80여 명이 모였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신입생 등록금만 인상한 것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세대 학생들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높은 할부 이자(연 8퍼센트~19.5퍼센트)를 무이자로 전환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되레 등록금을 인상한 성공회대에서는 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원기 의장은 “3월에는 학내에서 등록금 인하 분위기 만들고, 4월에는 지역별 집중 집회를 열고, 5월에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문제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비정규직이나 대졸초임 삭감 등 민주노총과 대학생들이 함께 싸울 사안이 있죠. 5월 1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거대한 집회를 열 생각입니다.”

학생,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의 대규모 행동으로 정부에 등록금 인하를 위한 획기적인 예산 책정을 강제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쫓아내자?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3만 4천 명을 들어오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3분의 2나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2만 9천 명을 강제 추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사랑 발린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체 경제활

동인구 2천3백66만 명 중 이주노동자는 9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주노동자 유입을 막는다고 해 봐야 전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의 일터가 내국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3D업종에 집중돼 있어서 일자리 잠식 효과는 더욱욱 미미하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는 취업자

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 행위는 다른 곳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이주노동자 비율이 크게 높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를 봐도 이주노동자 유입과 실업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듭거듭 드러난다.(<국제이주>, 109~112쪽, 피터 스토크)

근본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 경쟁 구도를 만들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 어떤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인가?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최대한 열악하게 유지하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또 이들의 존재를 구실로 내국인 노동자들

의 노동조건을 공격한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들의 ‘바닥을 향한 경쟁’은 저들만 이롭게 할 뿐이다. 정부가 이주노동자 유입을 통제하는 것은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들이 진정 노리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효과다. 즉, 치솟는 실업률이 마치 이주노동자를 탓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다.

“일자리 보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격에 맞서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해 싸우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동시에 향상시켰고 최근 이주노동자 해고도 막아낸 삼우정밀노조의 사례는 우리가 나아갈 바를 보여 준다. 조명훈 기자 | jomh@left21.com

종합

북한 인공위성 발사 논란

강대국이 하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북한이 하면 대량살상무기?

북한 인공위성 발사 예정일이 다가오자, 미국·일본·한국 정부는 북한 인공위성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개 인공위성 기술이 탄도미사일 개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인공위성 기술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은 명백히 과장이다. 북한은 1998년 광명성1호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설령 이번엔 북한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는 데 처음으로 성공한다 해도,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 이래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쏘아 올린 6천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 다.

게다가 미국은 ‘스타워즈’ 계획 등을 통해 지구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구상을 실현할 기술적 수단으로 인공위성 기술을 활용해 왔다. 일본도 이미 H-2A로켓으로 고도 3만6천 킬로미터 상공의 정지궤도에 위성을 쏘아 올렸고, 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얼마든지 전환 가능한 기술이다. 이쯤 되면 누가 진정으로 “중대한 위협”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일본·한국 정부는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

미국은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며 여전히 제재 위협을 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대응은 더 강경하다.

일본 우파들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독자적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MD를 통한 요격 운운하며 군사력을 증강할 명분을 쌓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우파들의 핵무장 발언은 단지 허세가 아니다. 일본 우파들은 1990년대 들어 발전한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추고자 재무장을 강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핵무장 국가가 되려는

북한 인공위성 기술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은 과장이다. 강대국들이 쏘아 올린 6천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 다.



미국의 MD 실험 장면 — MD야말로 진정한 대량파괴무기다.

야망을 숨기지 않아 왔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에 핵무기 제조 기술을 구축해 냈고, 핵무기 1만 기 가량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사용 후 핵연료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 시큐리티’를 보면, 일본은 북

한 인공위성 발사 논란이 한창인 최근에도 프랑스한테서 많은 양의 핵연료를 수입했다.

동아시아는 이미 미국·러시아·중국과 같은 핵무장 국가들이 있고, 여기에 일본까지 핵무장을 시도하면 그렇지 않아도 강대국들간 경쟁 때문에 불안정한 동아시아는 장차 끔찍한 핵전쟁 공포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PSI 참가는 위선적 압박에 동참하는 것

이명박 정부도 대북 강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식 참가를 추진하려 한다. 미국 주도로 80여 국가가 가입해 있는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색하고 필요하면 나포해 관련 부품이나 물질을 압류하는 군사 작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무해통항권과 배치된다. 무해통항권대로 하면, 특정 국가 영해를 통과할 때 연안국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모든 나라 선박은 자유롭게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

게다가 PSI는 완전한 이중 잣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미국과 강대국들은 북한은 엄두도 못낼 정도로 인류 전체를 파괴하고 남을 대량살상무기를 어디든지 운반하고 실전에서 사용하지만, 이는 전혀 PSI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얼마 전 키리졸브 훈련에 버젓이 각종 대량살상무기가 무더기로 동원된 것을 보라. 위험천만한 일본의 핵연료 수입도 전혀 PSI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이중 잣대를 적용해 왔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해상 봉쇄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는 도구로 PSI를 활용해 왔다. 물론 그때마다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2007년 4월

8일치)를 보면, 미국은 2007년 1월 북한이 친미 국가인 에티오피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는 눈감아 줬다. 당시 미국은 에티오피아를 부추겨 소말리아에서 친미 정부를 위협하는 이슬람 반군을 진압하도록 했는데, 이에 사용된 무기가 북한에서 수입된 것이다. 미국은 2002년에도 알카에다 소탕에 협조적이었던 예멘 정부에 북한이 무기 수출하는 것을 용인한 바 있다.

이렇듯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다는 PSI의 명분 자체가 위선일 뿐이다. PSI는 미국과 친미 강대국들이 제 입맛대로 사용하는 제국주의적 압박 수단일 뿐이다.

PSI 전면 참가는 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문·수색·나포하려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낳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

이명박 정부는 바로 이런 위선적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도 PSI에 은밀히 동참해 왔다.

물론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느라 제한적 범위에 머무르긴 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에 협조적이긴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도 북한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는 전면적으로 PSI에 동참하려 한다. PSI 전면 참가는 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문·수색·나포하려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낳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런 위선적 압박에 더 크게 반발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불안정을 고조시킬 위선적인 PSI 전면 참가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뉴 민주당 플랜’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민주당이 ‘뉴 민주당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골자는 ‘분배’ 대신 ‘성장’을, 중산층·서민뿐 아니라 부유층과 특권층까지 끌어안는 것이다.

‘뉴 민주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석은 “분배에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돼 있는 이미지를 바꾸고 성장을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석의 말마따나 민주당에게 분배 정책은 “이미지”였을 뿐이다. 단적인 예로,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빈부격차는 오히려 증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보면, 1995년부터 10년 동안 한국은 헝가리와 폴란드에 이어 소득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

또, OECD의 2007년 ‘한국경제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 9퍼센트였던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높아져 OECD 평균치(10퍼센트

트대 초반)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뉴 민주당 플랜’은 이미지일 뿐이었던 분배 간판을 이참에 떼고 “모두를 위한 번영”, 즉 “부자를 적대시하지 않는, 대기업을 적대시하지 않는 방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김효석은 이를 두고 “과거 우리 당[민주당]의 이미지와 다르고 한나라당과도 차별화되는 제3의 길”이라고 했다.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외피

원래 ‘제3의 길’은 미국의 클린턴 정부, 영국의 토니 블레어(노동당) 정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사회민주당) 정부 등이 주창했고, 한때 유럽과 세계 차원에서 중도 좌파의 핵심 의제였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제3의 길’을 추진한

바 있고, 노무현은 ‘좌파 신자유주의’를 자처하며 한미FTA 추진을 정당화했다.(독일 슈뢰더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제3의 길’을 ‘신자유주의적 좌파’라고 불렀다.)

토니 블레어의 정치적 ‘스승’인 앤서니 기든스 — 기든스는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해 김대중을 만난 바 있다 — 의 설명에 따르면, ‘제3의 길’은 “구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둘 다를 뛰어넘는 것이다. ‘뉴 민주당 비전위원회’에 참여한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제3의 길’이란 결국 서구의 구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동시적 극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3의 길’을 따른 정부들이 모두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구사했다는 사실은, ‘제3의 길’이 실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외피였음을 보

‘제3의 길’을 따른 정부들이 모두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구사했다.

여 준다.

무엇보다, ‘제3의 길’은 “모두를 위한 번영”이 아니라 “부자”와 “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했다. 클린턴은 재정적자 축소, 자유무역 등을 요구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월스트리트의 압력에 굴복해 건강보험·복지 개혁을 뺐개쳤고, 블레어는 보수당 정부보다 더 많은 민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사회 복지가 최대 속죄양이 됐다. ‘제3의 길’식 복지 ‘개혁’(이른바 ‘적극적 복지’, ‘일하는 복지’) 때문에, 1990년대 경제 호황으로 당시에는 그 잔

혹성이 상대적으로 덜 표면화됐지만,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레이건과 대처 시절보다 더 혹독한 시장의 잔혹함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제3의 길’이 “진보와 보수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강남 때리기’, ‘부자 때리기’ 정당” 이미지를 견어내겠다는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제3의 길’은 결국 집권을 위해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3의 길’은 분배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이 새삼 강조하는 “성장”은 자본 축적의 다른 말이고, 자본 축적은 다른 한편에서 빈곤의 축적을 낳는다.

이런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성장 만능주의”를 진지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는 조금치도 없다.

김인식 | kis@left21.com

정치

울산 북구 진보 후보 단일화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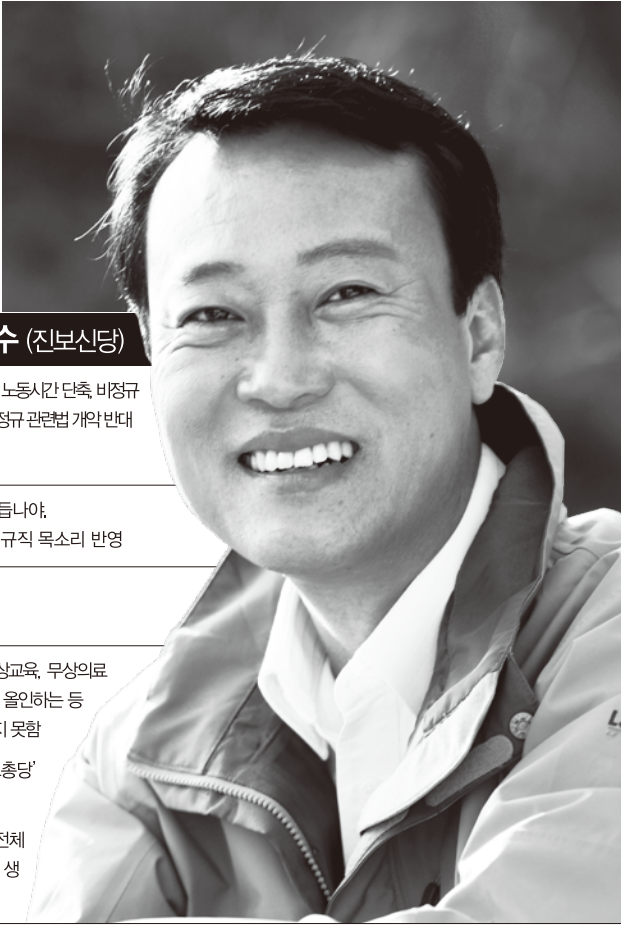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후보단일화 반드시 이룰 것”



4.29 재보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진보정치 1번지로 불려 온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주축이 된 진보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레프트21)이 단일화를 추진중인 민주노동당 김창현·진보신당 조승수 두 후보에게 몇가지 쟁점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두 후보의 현안 쟁점에 대한 입장

김창현 (민주노동당)	쟁점	조승수 (진보신당)
고용안정 특별법,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임금 삭감 막기 위한 사회적 소득보전 - 고용책임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청년고용활당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대안	1) 일자리 연대 : 총고용 보장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자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 반대 2) 최소 생계 보장 위한 복지동맹 구축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 계급적 원칙성 견지해야. 동지적 애정을 전제로 한 비판과 상호 노력	현대차 정규직 노조 지도자들의 비정규직 외면, 해결책은?	비정규직 끌어안는 진정한 산별노조로 거듭나야.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노사 교섭으로 비정규직 목소리 반영
아직 제기된 것이 없지만 '반한나라당 전선'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데 도움된다면 어떠한 것도 논의 가능	민주당과의 공조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 검토 대상 아니지만 모든 연합전술을 부정할 수는 없음
1) 중산층 음식물 자원화 시설 문제 등 북구에서 정치와 행정 책임진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가치와는 동떨어진 정치 철학에 기초했기 때문. 2) 해결책 : 이명박 독주에 맞서는 정치적 힘 형성. 진보적 가치 실현할 주민 의제 의 '주민 운동화', 조직적 토대 강화	2005년 이후 울산에서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안은?	1) 진보좌파 정당의 자기 정체성 상실 :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뒤통에 밀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몰입하는 등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야수로 만들지 못함 2)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민주노동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3) 해결책 : 사회연대전략 등 노동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정치, 복지동맹, 녹색 생태 경제 등 새로운 사회의 상 제시



오랫동안 진보정당 운동에 헌신해 왔고 진보정당의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을 거쳐 온 두 후보는 답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에 맞선 진보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창현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정책은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노동자 고통전담 정책이며 ...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했다. 조승수 후보도 “쥐꼬리 최저임금을 다시 삭감”하고 “조직 노동자의 임금 삭감 방안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김창현 후보는 “10대그룹(64개업체)의 현금성 보유자산이 431조나” 된다고 하며 이런 돈을 이용해 “재벌대기업부터 청년층 의무고용을 시행”하고 “비정규직 20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조승수 후보도 “노동시간 단축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정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비정규 관련법 개악 반대” 등 진보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창현 후보가 자본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조승수 후보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일자리연대’와 ‘복지동맹’ 등 노동자 내부의 격차 해소를 강조하는 미묘한 차이는 있었다.

비정규직과 연대를 외면한 정규직 노

조 지도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창현 후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계급적 대의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승수 후보도 “노동조합 지도부가 조합원 정서 중 일부분을 변명거리 삼아서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한 측면”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를 다수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대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타당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입장이 실제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대한 헌신과 이를 외면하는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매서운 비판으로 이어질지 기대한다.

진보적 대안

민주당과 공조 문제에서는 조승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비판적이었다. 조승수 후보는 “현 단계에서 민주당과의 공조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며 “그들은 한미 FTA를 추진한 세력이며 비정규 악법을 만든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김창현 후보도 “미디어법 타협과 같은 어정쩡한 태도로는 진보진영과의 단결

이 힘들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지만 “‘반한나라당 전선’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물론 조승수 후보도 “어떠한 연합전술도 부정하는 것을 현실 정치세력이 취할 태도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제한적 쟁점을 둘러싼 일시적 공조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전략적인 선거공조는 안 된다는 입장은 분명할 필요가 있다.

울산에서 진보정치의 성공과 위기에 대한 평가 문제에서는 두 후보가 서로 상이한 평가를 내렸다. 김창현 후보는 “북구에서 정치와 행정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정치 철학에 기초했기 때문”이라며 진보신당 쪽의 책임을 물었다. 반면 조승수 후보는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에 의해” 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공약은 뒤통으로 밀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몰입하는 등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야수로 만들어 나가는 데 무능한 모습을 보여” 준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조승수 후보는 또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계획을 포

함한 사회연대전략’ 등 노동자 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정치를 보여 주지 못”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 마련 책임을 사용자만이 아니라 정규직에게도 지우자는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계급의 진정한 연

김창현 후보와 조승수 후보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는 명백히 다른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고 울산에서 반이명박 진보 진영의 승전보를 올리길 기대한다.

대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정규직 양보론에 문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은 수긍이 가진 않는다.

한편,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비정규직 투쟁 연대 외면이 진보정치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현대차 노조 지도부가 류기혁 열사 투쟁을 외면했던 2005년에 민주노동당 지도부였던 김창현 후보는 당시 분명한 비판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몇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김창현 후보와 조승수 후보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는 명백히 다른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며, 이루어질 것”(김창현), “단일화에 실패하면 공멸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일화는 될 것”(조승수)이라며 단일화를 낙관했다.

울산에서 진보정치를 싹틔우는 데 크게 기여한 두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고 울산에서 반이명박 진보 진영의 승전보를 올리길 기대한다.

장호중·전지윤 기자
rednuc@left21.com / ratm71@left21.com
* 인터뷰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http://www.left21.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꼬리 자르기 식 조사 발표 뒤 신영철도 버티기에 들어가며 더러운 사법 추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쫓불판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신영철의 행각을 알고 질책까지 했다는 대법원장 이용훈이 왜 굳이 신영철을 대법관으로 추천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삼심 특검 사건을 변칙 재판으로 처리해 진정한 ‘사법 추문의 주인공’이라는

이용훈은 ‘가재는 게 편’이듯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범죄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비판을 받고 있는 이용훈은 ‘가재는 게 편’이듯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범죄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신영철을 공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 한나라당 등 우파와 사법부 상층 관료들로부터 반발이 있을까 봐 우려한 듯하다.

잠시 시간을 번 이용훈과 대법원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판사들을 더한층 통제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영철이 보낸 이메일 유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며 양심적 판사들에게 으름장을 놔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사법부

내에서 보수적인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1심에서 50여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철도노조에게 2심에서 70억 원 배상을 선고하는가 하면 농성장 철거에 맞서 몸싸움을 벌인 것을 두고 동우화인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행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사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 법 위에서 권력을 휘둘러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를 통제할 법적수단이 전혀 없다. 신영철이 코드를 맞춘 이명박식 ‘법치 민주주의’란 권력자들의 민주주의인 것이다.

지금대로라면 기껏해야 신영철을 정직 처분한 뒤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은 판사들과 기층 운동에 칼 끝을 거늘 공산이 크다. 이명박 정부와 사법부의 유착은 한층 은밀하고 공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 이자들을 물러나게 만들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지난 3월 19일 법원노조는 양심적 판사들을 방어하고 신영철을 사퇴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런 행동이 더 많아져야 한다.

장호중 기자 rednuc@left21.com

종합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빛 좋은 개살구’ 만큼 G20 정상회담을 잘 묘사하는 말도 없다. 2008년 11월 전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자고 이른바 G20이 결성되고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미국 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연평균 10퍼센트 이상 성장하며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의 양대축이던 중국 경제는 2008년 4분의 4분기에 6.8퍼센트 성장했다. 같은 기간, 유럽 경제의 기동인 독일은 -8.4퍼센트, 일본은 무려 -12.7퍼센트나 하락했다. 한국과 타이완 같은 제조업 수출 국가들의 경우에는 -20퍼센트를 밑돌 지경이었다.

경제 위기 앞에서 기업들은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 등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에만 4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말했다. 이것은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은 우왕좌왕했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G20 주최국인 영국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이번에는 진짜로’ G20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참가국들 사이의 뿌리 깊은 이견을 볼 때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G20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펴자는 미국과 재정적자의 폭발적 증가와 국가 부도 사태를 두려워하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가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 국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쪽과 중국·일본·한국처럼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한다.

이명박은 G20 정상회담장에서 한-EU FTA를 공식타결해 자유무역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심산인 듯하다. 사실 지난번 11월 정상회담 때도 이명박은 ‘보호주의 모라토리엄’을 제안했다. 당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G20을 보도할 때 이명박의 ‘이 자도 꺼내지 않았으나, <조선일보>는 ‘G20 국

제무대서 인정받은 이 대통령’이라는 황당한 보도를 하는 촌극도 벌어진 바 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무역 원칙이 합의문에 포함되더라도 실천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 정책을 유지하자고 합의한 후에 오히려 보호주의가 더 강화됐다.

최근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담에 참가한 스무 나라 중 열일곱 나라가 이후 보호주의 조치를 도입했다. 더구나, 최근 IMF가 경제 위기로 2009년에만 세계 무역이 10퍼센트 가까이 축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마당에 FTA 등 자유무역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너무나 황당하다.

G20 정상회담은 빛 좋은 개살구

물론, G20을 앞두고 주류 세력들 사이에서 그럴 듯한 제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IMF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을 제고하려면 금융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더 많은 국제적 정책 공조와, 내수를 늘리기 위한 지속적 정책이 필요하다.”

IMF는 역겹기 짝이 없는 기구지만, 이것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G20 정상들도 이 말이 맞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실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지하려는 현존 체제가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 미친듯이 서로 경쟁하는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를 늘릴 방법은 간단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 가구의 부채를 탕감하고 사회복지망을 늘려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펑펑 쓸 수 있게 해 주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가의 이윤을 깎아 먹을 것이고, 이것을 실천한 국가나 기업은 국제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경쟁자인 일본과 한국의 대기



지난해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에 항의하는 시위. 시위대들이 '자본주의를 묻자'고 적혀 있는 배너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 출처 플리커

업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돈(한국 - 8백조 원, 일본 - 2천8백조 원)을 쓰지 않고 쌓아 놓은 채 일자리와 임금을 늘리기는 커녕 경쟁적으로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수퍼 추경’을 포함해 각국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몇 달 동안의 반짝 효과밖에 없는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들이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 뻔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돕고 공공서비스 축소를 시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1월처럼 이번에도 G20 정상들은 활짝 웃으며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 즉, 일자리, 빈곤,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노동자·서민이 양

보를 요구하며 싸우는 것밖에 없다. 예컨대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대규모 파업을 벌이고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이명박과 비교될 정도로 오만하고 고집불통인 우익 대통령 사르코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이 열릴 영국 런던에서는 3월 28일에 노동조합, NGO, 좌파 정당, 환경 운동가, 반전 활동가 등이 함께 결성한 ‘사람이 최우선이다!’ (Put People First!)가 G20 정상회담에 맞춰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쟁, 지구적 정의, 기후 변화, 빈곤 퇴치 등의 쟁점과 특히 경제 위기 해결책 같은 쟁점들을 놓고 G20과는 다른 대안을 내놓고 투쟁할 계획이다. 이런 기층투쟁을 건설하고 확대할 때만이 G20 정상들이 하지 못하는 경제 위기 대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욱 기자 | ohotange@left21.com

김문성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연구부장 기고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금산분리는 1981년부터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1982년에 도입됐으므로 그 취지 자체가 사기업의 금융기관 소유를 막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1990년대 중반 보험·증권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업을 산업자본이 소유·경영하는 것이 모두 허용됐고, 은행을 보유할 만한 산업자본이란 삼성·현대 같은 재벌일 것이므로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은행 보유 허용 정책”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어떻게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일까.

하나는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리고, 사모펀드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은행을 소유하려는 사모펀드에 산업자본 지분이 20퍼센트까

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삼성은 최소 20조 원 대의 보유 현금을 동원해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최근 국민은행의 시가 총액이 10조 원에 못 미치니, 은행 소유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미 삼성생명은 대구은행의 지분 7.3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 등의 문제로 은행을 직접 인수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온 안전판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다.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산업자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미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돼 재벌증권사들은 지급결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사를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은행 소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06년에 우리은행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숨겨 주려고 대량의 차명계좌를 관리해 준 사건이 있었다. 당시 우리은행 행장은 삼성증권 사장 출신인 황영기였다.

이 정도 인적 연결망으로도 대규모 비자금 은닉과 불법 계좌 개설, 계열사 지배가 가능한데, 재벌이 직접 은행을 소유한다면 수천만 명의 예금이 재벌 사금고처럼 운영될 것이 뻔하다. 지금도 재벌보험사들은 고객의 보험금을 계열사 지분 확보에 쓰고 있다.

재벌 은행의 예금은 부실 계열사 지원으로 빠져나가고, 분식회계도 더 쉬워지며, 대출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은행의 기본 기능이 왜곡된다.

특히, 경제 공황기에 거대한 금산복합체는 특정 기업의 부실을 경제 전체로 확산시킬 위험성을 키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서민은 금융 혜택에서 체계적으

로 배제되고 구조조정 속죄양이 될 공산이 크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 선진국들이 금산분리 사전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진실은 정부가 밝히지 않은 곳에 있다. 이들 나라에선 사후 규제가 사전 규제 수준이다.

산업자본이 금융기업을 소유하면 그 해당 기업 전체가 금융기관 수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미국·영국은 주요 5대 은행에 1퍼센트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산업자본이 전무하다. 독일의 경우에도, 5대 은행 중 한 개 은행에 3.72퍼센트 보유 한도가 유일하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사모펀드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처럼 금산분리 완화는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본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야욕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이 재벌의 은행 소유에 반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옳

은 일이다. 은행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게 필요한 이유다. 은행 국유화는 그 출발점일 뿐이다.

?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거액을 내고 만든 펀드로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와 투자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면서 미국에 있던 외환은행 지점을 모두 매각해야 했다.

지급결제제도
지로, 자동이체, 급여 지급 등 현금 지불 이외의 수단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지급결제 은행 예금 계좌에만 허용되던 이 기능을 증권사 CMA 통장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들이 은행처럼 예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지급결제기능도 곧 통과될 예정이다.

국제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에게 듣는 오바마의 대외정책

“오바마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충실할 것”

‘전쟁광’ 조지 부시를 대신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 오바마는 ‘변화’를 약속하며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국’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는 부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테러와의 전쟁’은 진정 끝나는 것인가? 오바마는 전쟁과 학살로 점철된 한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을까?

중동 지역 전문가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를 만나 오바마 시대 미국의 대외정책 — 특히 가장 뜨거운 지역인 중동을 중심으로 — 에 관해 들어 봤다.

오바마의 전쟁은

부시 전쟁의 표면적 유화

“‘테러와의 전쟁’의 본질은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특히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매우 중요한 지역인 것이죠.

“오바마의 ‘테러와의 전쟁’은 기존의 부시 정부가 했던 것을 표면적으로 유화시키는 측면은 있겠지만 본질에서는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부시의 전쟁이 오바마의 전쟁으로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가장 중요한 전략 지역이자 분쟁 지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한 뒤 내린 첫번째 대외정책 결정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증파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최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파키스탄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군도 무자비한 폭격으로 응수하면서 전장이 파키스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카스피해 유전을 아시아 시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약화시키려고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레반을 알카에다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카에다가 용병 출신들을 내세워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민간인들에게 부정적인 행위를 벌여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는 데 반해, 탈레반은 전 국토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탈레반이 차기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탈레반과 적대 관계인 이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탈레반은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란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는 것을 위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싸고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오바마는 이란력(曆) 새해 [3월 20일]에 맞춰 발표한 화상 메시지를 통해 이란에 “건설적인 협력”과 “새로운 출발”을 제안하는 등 화해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 일주일 전인 13일에는 1995년부터 계속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연장하기도 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올해 6월 12일 이란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은 이란 내부의 정권 교체와 변화보다는 미국이 이란에 어떤 태도와 정책을 취할 것인지



유달승 교수

사진 레프트21

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란 정책의 핵심은 이란 정권 교체입니다. 즉,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붕괴시키고 반미 국가에서 친미 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최근 미국이 이란에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이지 근본에서 이란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라크는 어떻게 될까? 오바마는 대선 후보 시절 이라크 주둔 미군을 16개월 내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뒤인 지난 2월에는 2011년 말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마무리 지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이라크가 미국에게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라크는 중동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나라고, 따라서 이라크의 군사 기지는 중동 전역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와 이라크 정부 간 협정을 통해 형식적으로 미군 규모가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특수부대, 전략부대는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은 오바마 전쟁의 핵심 전략 지역

미국이 정치·군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중동 지역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해 온 것은 바로 ‘경비견’ 이스라엘이었다. 2006년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늑에 빠진 미국을 대신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였고, 최근에는 가장 침공으로 자기 힘이 녹슬지 않았음을 과시하려 했다. 오바마 시대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 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미국은 중동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군이 친미 아랍국가들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불패 신화가 깨진 것이 2006년 헤즈볼라와의 전쟁이었지요. 이것은 중동에서 큰 파급효과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투력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가자 침공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 복원이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기 반입과 관련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과 협정을 맺고는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뒤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랍 세계의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아랍 세계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한 것입니다. 기존 아랍 세계에서 만형 구실을 한 국가는 이집트였는데, 이번 협상을 둘러싸고 그 위상이 크게 실추됐습니다. 반면 시리아가 아랍 세계 재편에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 급부상했고, 대표적 친미 국가였던 카타르가 기존과 다른 태도를 표명하며 돌아섰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이 가자를 침공한 이후 친미 아랍국가의 위상이 약화한 반면 반미 아랍국가의 위상이 높아졌고, 더불어 아랍 세계에서 이슬람 강경파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은 아랍 세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고 시리아와도 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단호한 메시지였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2001년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병참기지로 활용돼 온 마나스 공군 기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레이트 게임’ [19세기 초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벌인 정치·군사적 경쟁]이 21세기에도 재현될 것인가?

“지난해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한 배경에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추진하며 중앙아시아 곳곳에 군사기지를 배치하고 MD체제[미사일방어 체제]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러시아는 에너지를 통해 자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아프가니스탄에 친미 국가가 수립되면 러시아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이 카스피해 유전의 수송로를 확보하면서 국제 석유·가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증대하는 것에 반대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처지에서 자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상황 변화에 맞춰 적절히 협력과 비판을 하며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큼니다.”

유달승 교수는 인터뷰 내내 오바마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을 경계하며 미국의 전략적 이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부시의 미국’ 이든 ‘오바마의 미국’ 이든 그들의 본질적 이해관계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만의 시대를 끝장낼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이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영훈 기자 | jomh@left21.com

유럽·미국·한국 4.4 국제반전공동행동

“지금은 점령과 전쟁을 끝낼 때,
군비가 아니라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때”

일시 : 4월 4일(토) 오후 3시 / 장소 : 보신각

시민 사회 노동 단체 공동 주최 / 문의 : nowar4.4@gmail.com



국제

파키스탄

대중 운동이 친미 부패 정부를 위기에 빠트리다

3월 22일,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정부는 대중 시위에 밀려 전임 군사독재 대통령 페르베르 무샤라프가 해임한 판사들을 복직시켜야 했다. 이 운동은 아이움 칸을 몰아냈던 1969년 이래 가장 큰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승리 때문에 오바마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략적 마디라 할 수 있는 파키스탄 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됐다. 이 글은 미국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가 파키스탄 사회주의자 스네할 싱가비와 인터뷰한 것을 축약·번역한 것이다. 번역 전문은 www.left21.com에서 볼 수 있다 — 편집자

“이프티카르 초드리가 대법원장으로서 복직했는데, 이는 파키스탄 민중이 일구어 낸 굉장한 승리입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와 사법부 독립성의 회복을 요구했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의 직접적 수혜자는 초드리이지만, 1999년 무샤라프 쿠데타로 쫓겨났던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도 상당한 혜택을 입었습니다. 샤리프는 판사들 복직을 요구하는 변호사운동과 함께 했고, 그 덕분에 그의 인기도 급상승했습니다.

이제 샤리프는 정치 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습니다. 샤리프는 1999년 쿠데타 뒤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고, 무샤라프가 총선에서 패배한 2007년 하반기에 파키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샤리프의 파키스탄무슬림리그-나와즈(PML-N)와 부토의 파키스탄인민당(PPP)은 무샤라프의 정당을 이기려고 성격이 모호한 선거 연합을 맺었습니다. 자르다리는 부토가 암살됐던 2007년 12월 이후에 PPP의 후보가 됐고, 2008년 8월 말 선거를 통해 거국내각의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자르다리는 샤리프에게 초드리와 판사들의 복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 다. 판사들이 복직하면 자신의 부패 혐의를 면제해 준, 무샤라프의 ‘국가화해령’이 폐지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자르다리와 그의 동맹은 샤리프와 민주화운동에 날을 세웠습니 다. 2월 말 무샤라프가 임명한 대법원은 나와즈 샤리프와 그의 동생 사바즈 샤리프가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바즈 샤리프는 파키스탄의 최대 주(州)인 펀자브 주총리였습니다. 법원이 사바즈 샤리프를 해임하자, 자르다리는 선출된 주 정부의 행정권을 박탈하고, 중앙에서 직할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국내의 언론들은 주로 샤리프 형제에게 관심을 기울였지만 변화의 진정한 동력은 거리로 대거 쏟아져 나와 자르다리 정부의 부패와 위선에 도전했던 평범한 민중에게서 나왔습니다.

자르다리가 어긴 약속이 저항을 불러

자르다리는 모든 약속을 어겼습니다. 무샤라프가 해임한 판사들을 복직시키겠다는 약속, 무샤라프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 권한을 버리겠다는 약속, 국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 모두를 어겼습니 다. 그는 국가가 자기의 놀이터인 양 통치했던 무샤라프식 정치로 회귀했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판사들의 복직 요구를 묵살한 것이었습니다. 대다수 파키스탄인들은 초드리가 공정하고 진실하며 법률의 진정한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는 고위 관료들의 부패를 조사하고 무샤라프에 맞서 이른바 ‘실종’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무샤라프가 초드리를 해임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 다. 그래서 자르다리가 초드리를 복직시키지 않자 사람들은 자르다리를 혐오하게 됐습니 다.

둘째, 자르다리는 파키스탄 북서변경주와 와지리스탄 남부에서 미국이 탈레반과 그 동맹 세력을 상대로 벌이는 군사작전을 도왔는데, 이것도 파키스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탈레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미국과 파키스탄 군대가 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데 격분했습니다.

셋째, 파키스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식량 배급을 타려고 긴 줄을 서는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 다. 실업이 늘고 있고, 대도시에서도 폭하면 전기가 끊깁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



해임된 판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3월 16일 ‘대장정’

사진 출처 플리커

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르다리는 파키스탄 경제의 모든 나쁜것 — 부패, 엘리트주의, 연고주의 — 을 대변하는 인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反)자르다리 운동의 주요 세력

세 세력입니다. 첫째, 변호사운동, 둘째, 보수적 이슬람주의 정당인 자마트-에-이슬라미(JeI)와 샤리프의 파키스탄무슬림리그-나와즈, 셋째, 시민사회조직입니다.

변호사운동은 아이차즈 아산이 이끌고, 법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변호사와 해임된 판사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해임 판사들의 복직과 파키스탄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으로 모아집니 다.

자마트-에-이슬라미와 파키스탄무슬림리그-나와즈는 종교에 기반을 둔 보수 정당입니다. 그와 동시에, 보통의 회주의 정당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무슬림리그-나와즈는 펀자브 주에서 영향

프랑스 총파업

3백만 명이 사르코지에 반대해 행진하다

3월19일 사르코지 집권 후 두 번째 총파업으로 프랑스 전체가 마비됐다.

2백여 곳의 도시와 소도시에서 3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진했다. 1월 29일 총파업 때처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노동자들도 대거 파업에 동참했다.

3월19일 이후로도 부문별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대학 강사와 대학 교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19일 파업의 핵심 메시지는 우익 사르코지 정부의 정책들과 경제 위기 대책에 대한 반대였다. 사르코지는 연금을 삭감하고 많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없애려 한다.

사르코지 정부는 엄청난 돈을 은행에 쏟아 붓는 ‘구제 정책’을 폈지만, 그 사이에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로 2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대중은 3월 19일 파업에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70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파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시위 대열은 프랑스 수도 파리의 심장부인 공화국광장에서 파리 전역을 휘감을 정도로 많았다.

행진 대열이 출발한 이후에도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행진에 동참했다.

25세의 수습 교사 쥘다 아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정리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교사들의 노동시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사르코지는 집권하고 나서 우리에게 프랑스에서 살고 싶으면 빠 빠지게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자 사람들은 더 힘들게 일하면서 더 적은 돈을 버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파리 시위 참가자들의 구성은 대형 노조의 조직 노동자들에서 홀리데이인 호텔의 저임금 노동자들까지 매우 다양했다.

또, 민영화 반대 투쟁을 벌이는 우체국 노동자, 연구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대학 연구생, 의료지원 삭감에 항의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쌍 파피에’, 즉 영주

권이 없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 등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도 볼 수 있었다.

각종 플래카드·포스터·스티커에는 44일 동안의 파업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포함해 1백70개 요구를 따낸 서인도 제도의 프랑스령 과달루페와 마르티니크의 모범을 본받자는 내용이 많았다.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

반자본주의신당(NPA)의 활동가들도 이날 시위에 대대적으로 참가했다.

NPA 지도자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프랑스에는 한 번 싸워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노동자와 청년 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경제 위기 때는 흔히 나 혼자 살고 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프랑스에서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단결했습니다. 이제 이 힘을 무기한 총파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지금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 지도자들은 시위 직후 회동에서 3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5월 1일 다시 한 번 하루 총파업을 벌이기를 기대한다.

68년 항쟁 투사이자 NPA 전국정치위원회 일원인 알랭 크리빈은 이런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사례는 과달루페와 마르티니크입니다.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생활조건과 임금이 공격받고 있을 때, 하루 파업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매번 하루 파업을 준비하는 데 너무 많은 역량이 소모될 뿐 아니라 파업 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잠시 회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던가 아니면 더는 싸우지 말자고 말이지요.”

투쟁이 더 커지고 격렬해질수록, 운동

력이 큰데, 그곳에서 자르다리와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와즈 샤리프의 주가 가 상승했는데 그가 판사들을 옹호했기 때문입니 다. 이 사실은 모순적인데, 샤리프가 총리로 재임하고 있던 1997년에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사자드 알리 샤를 해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샤리프 당의 행동 대원들은 대법원 건물로 쳐들어가 대법원장을 협박했습니다. 샤는 샤리프에게 부패 책임을 물으려다 그의 분노를 샀고,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게 됐습니 다.

요즘 샤리프는 사법부의 수호자로 자임하면서 점차 포퓰리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마트-에-이슬라미와 함께 파키스탄무슬림리그-나와즈는 지지자들을 대거 거리로 불러냈습니 다.

그러나 시위대 다수는 시민사회 조직에 속하지 않거나 특별한 연고가 없는 학생·노동자·종간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좌파가 취약하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좌파는 성장하고는 있지만 단체 규모나 명성이 운동을 주도할 수준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노동당(LPP)은, ‘인민항쟁’이라는 단체와 함께 이른바 ‘대장정’을 이끌었습니다. 파키스탄 국제사회주의자들(IS)은 라호르(펀자브의 주도)의 고등 법원에서 벌어진 연좌시위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좌파들의 이런 활동은 인상적인 발전입니 다.

거리의 분위기는 아주 끝내줍니다. 한 여성 활동가는 군부 독재자 아이움 칸을 타도했던 1969년의 운동 이래로 이런 운동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힘을 느끼면서 짜릿해 하고 있습니다. ‘대장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지만, 투쟁은 계속된다”였습니다. 매우 전투적인 분위기입니다.

상황은 아주 좋지만 좌파들이 이런 정치적 기회를 잘 이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달 동안 튼튼하고 강력한 좌파를 건설하기에 진정 좋은 기회가 펼쳐질 것은 확실합니다.”

번역 차승일

?

반자본주의신당(NPA)
프랑스 사회당이 신자유주의에 투항하고 프랑스 노동자·민중 투쟁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올 2월 초 공식 출범한 좌파 정당. 이 정당의 지도자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40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

의 앞날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고 중요해질 것이다.

지금 공장과 작업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호소하는 NPA의 활동이 주류 정치권과 보수적인 노조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프랑스에서 콜린 스미스
출처 영국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기자

민주노총, 무엇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현재 보수언론과 우파들의 민주노총 때리가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호응 속에 민주노총을 탈퇴하겠다는 세력들도 일부 등장하고 있다. 한편, 4월 1일 민주노총 지도부 보궐선거도 다가오고 있다. <레프트21>은 이 상황에서 노동운동에서 상대적 좌파 진영에 위치한 단체의 활동가들을 초대해 위기와 혁신에 대한 좌담을 마련했다. 이경수 노동전선 운영위원, 전원배 민주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정종남 다함께 노동팀장이 좌담에 참여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은 3월 24일 오후 서울 명동의 티베트 레스토랑 포탈라에서 <레프트21> 전지운 노동당 기자와 사회로 진행했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고통전기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가능성과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좌담이 노동운동의 위기와 혁신을 고민하는 동지들에게 영감을 주길 기대한다.

사회 성폭력 사건 이후 보수언론에서 민주노총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공격을 어떻게 볼 것이지부터 얘기해 보죠.

전원배(이하 전) 성폭력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별 때깔이 나서서 크게 과장 보도를 하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이명박이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 이명박은 개념이 명확해요. 자본가들의 이해와 요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했죠. 노조 활동가들의 비리나 일탈은 2002~2003년부터 징후가 보였고 혁신 시도가 있었으나 내부의 담합구조로 막혔고 결국 중요한 시기에 결점타를 맞고 있죠. **이경수(이하 이)** 자본의 위기 속에서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투쟁하는 조직으로 대변되고 있기에, 그 조직의 도덕적 측면을 묻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 빌미를 제공한 우리 내부의 문제를 치료하는 건 다른 문제로 치더라도,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의 약한 고리를 잡고 공격하는 거죠.

사회 왜 노조 간부들의 비리나 일탈이 계속 벌어지고 해결되지 않을까요? 위기의 진정한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로 넘어가 보죠.

전 뿌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노총이 95년에 출범했는데 전노협이 나름대로 쌓았던 성과와 투쟁성들을 부정해 버리면서 가 버렸죠. 소련의 붕괴로 사상적으로 혼란을 겪던 시기였고 신자유주의가 밀려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영된 거였죠.

96~97 총파업이 첫 시험대였는데, 당시 밑에서 엄청난 투쟁력이 나왔다는 것을 상층에서 '수요파업'으로 전환하며 제압해 버렸어요. 그때 이미 허리가 부러졌고 98년 김대중 당선하고 노사정위에서 지도부가 [정리해고요] 사인을 해 버렸죠. 지금 민주노총은 혁신의 모범답안을 실현할 수 있는 체력이 없어요.

정종남(이하 정) 민주노총의 위기와 혁신을 얘기할 때 상이한 내용들이 뒤섞인 측면이 있어요.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중이 볼 때 한국노총보다 낫고, 이 때문에 거부로 저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투쟁력도 교섭력도 없다면 조중동이 이렇게 공격할까요. 물론 민주노총의 비민주성과 관료주의가 명백히 증가했고 이것이 실망과 상처를 남기고 있어요. 그러나 간부의 비리나 일탈로 80만의 조직 전체에 대한 기각으로 나아간다면 카드를 뒤엎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위기는 민주노조 운동이 자기지향을 잃은 것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이 체제 변화적인 지향을 잃었거나 포기했기 때문에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 위기론의 귀결은 변혁 지향의 투쟁 세력들을 어떻게



사진 임수현

거세하느냐는 거였죠. 민주노총 주류 세력들은 사회적 합의주의,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을 지향해 왔고, 이를 위해 어용세력과 타협하면서까지 집행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성까지 해쳤고, 조합원들도 고립을 벗어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시위를 줄이고 편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위기가 심화됐어요. 계급적 좌파 진영도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대안세력으로 서는 것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 투쟁보다 교섭을 우선시하는 시도를 때문에 밀리는 일이 되풀이 돼 왔다

파업 만능으로 가서 망한 것이 아니라 맨날 '뺑 파업' 해서 실망시킨 것이 민주노총 15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모든 해고 금지, 임금 삭감 금지 이런 걸로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 빠져나가고 있죠.



전원배 민주노동자연대 운영위원

는 데 공감합니다. 작년 촛불 때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파업을 했다면, 지금 이런 위기 얘기는 안 나왔겠죠. 민주노총은 이런 기회들을 놓쳤어요. 노동조합 관료주의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타협적 세력들이 10년 동안 장기 집권했다고 하했는데 1998년에는 좌파 지도부도 일정한 부분 책임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개인들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노조 간부들이 현장과 멀어져 협상에만 골몰해야 하는 객관적 위치에 놓이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현장 민주주의와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통제와 힘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4월 비정규직법 개악 등에 관해서 민주노총이 파업을 조직하고 나선다면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며 지지 받을 수 있고 현장 동력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급속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수백 명씩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부에 보고하지 않고 있고 중앙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마라톤을 2시간 10분에 뛰면 잘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루에 적어도 20킬로미터씩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자기 조합원들 잘려 나가는 것도 못 막고 있어요.

간부들의 관료주의는 부차적인 문제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선거에서 민주적이거나 혁명적인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98년에 있어서 2002년 발원 파업 때도 현장파가 지도부였지만 두 번 다 치명적 오류를 범했죠. 98년에 단병호의 급속연맹과 양경규의 공공연맹 등 다 민주노총 총파업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깨졌죠. 당시 현대차 지도부가 '우린 파업 못하겠다. 배째라'고 했던 거예요.

좋은 처방 내리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조직과 연가 얘기는 안 나왔겠죠. 민주노총은 이런 가를 보면 참담합니다. 울산에서 왜 현대중공업 오종쇄 지도부만 까죠? 정치조직과 연관된 현대차 집행부에 대해서는 왜 모두 침묵합니까?

이 민주노총이 지향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경제적 실리를 어떻게 취할 거냐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급적 관점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용의 방패막이로 비정규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된 거죠. 경제적 조합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노동운동을 고민하는 동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계급적 지향을 조합원 대중에게 확인시켜 나갈 거냐가 문제입니다.

전 민주노총을 과연 혁신할 수 있을지 비판적입니다. 2004~2005년 혁신 투쟁하는 과정에서 직선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다른 동지들이 했던 얘기가 '직선제 한다고 되겠냐'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 직선제가 매개가 돼 아래로부터 운동이 벌어져 기풍을 세우자는 것이었는데 무산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수노조 시대를 하릴, KT 등은 떨어져 나가서 제3노총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 세력은 그들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백가쟁명 시대로 가서 각자 나름대로 집을 짓고 검증을 받아내면서 크게 모여질 수 있는 기간을 겪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 저는 더 투쟁적이고 좌파적인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에 동의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현장파 연합 후보가 나오길 참 바랐어요. 당시 가능성만 볼 게 아니라 좌파 맹목 다 민주노총 총파업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깨졌죠. 당시 현대차 지도부가 '우린 파업 못하겠다. 배째라'고 했던 거예요.



이경수 노동전선 운영위원

을 다 모아서 공동 대응했으면 합니다.

물론 좌파가 집행부에 들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죠. 지금 제기되는 혁신 방안은 대체로 안에서 집행부를 바꿀 것이지 아니면 나가서 따로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장 노동자들의 힘으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조직력이 살아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모든 문제를 집행부 교체나 아니라로 치환해 버리는 거죠.

전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 민주노총이 안 움직여도, 급속노조가 안 움직여도, 단위노조가 여전히 힘이 있는 상태면 좋은 양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단위 투쟁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혁신이 무망하다는 것입니다. 차고 열악하고 탄압받는 노조들은 아직 민주적인 작동을 갖고 움직이는데, 급속과 공공의 대형 사업장들에서는 한국노총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죠. 이번에 보궐선거 대응을 위해 모여려 했던 단위들도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범좌파라는 생각 자체가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사회 지금 직선제 문제, 복수노조 시대의 과제, 민주노총 안에서 혁신이 가능하냐 등이

현재의 위기는 민주노조 운동이 자기지향을 잃은 것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이 체제 변화적인 지향을 잃었거나 포기했기 때문에 위기가 된 것입니다.

제기했는데 더 얘기를 이어가죠.

이 '민주노총 죽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죽었으니 갖다 치우자'는 건지, '죽었으니 아니면 나가서 따로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장 노동자들의 힘으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조직력이 살아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모든 문제를 집행부 교체나 아니라로 치환해 버리는 거죠.

전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 민주노총이 안 움직여도, 급속노조가 안 움직여도, 단위노조가 여전히 힘이 있는 상태면 좋은 양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단위 투쟁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혁신이 무망하다는 것입니다. 차고 열악하고 탄압받는 노조들은 아직 민주적인 작동을 갖고 움직이는데, 급속과 공공의 대형 사업장들에서는 한국노총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죠. 이번에 보궐선거 대응을 위해 모여려 했던 단위들도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범좌파라는 생각 자체가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정 저는 더 투쟁적이고 좌파적인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에 동의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현장파 연합 후보가 나오길 참 바랐어요. 당시 가능성만 볼 게 아니라 좌파 맹목 다 민주노총 총파업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깨졌죠. 당시 현대차 지도부가 '우린 파업 못하겠다. 배째라'고 했던 거예요.

사회 지금 직선제 문제, 복수노조 시대의 과제, 민주노총 안에서 혁신이 가능하냐 등이

복수노조는 허용되는 과정이 기회일 수 있죠. 제대로 싸우고 조직하면, 민주노총 것 발을 더 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민주노총 바깥에서 혁신하자는 건 선부름입니다. 정부가 그토록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이유는 여전히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에게 의미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CIO 운동처럼 기존 노조가 아래로부터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기층에서 새로운 흐름이 광범하게 있다면 지지할 수 있지만 지금 어디 그러냐 하는 것이죠.

전 지금 세계경제가 초유의 공황입니다. 29년 대공황에서 벗어난 것은 2차 세계대전이러는 아관적 전쟁을 통해서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스럽지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력에게는, 그런데 운동전영은 일국적이예요. 단지 정부를 바꾸면 좀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수준이예요. 그래서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당과 공조를 폐지 못하는 것이죠.

'열심히 싸워보자' 이런 이야기는 정말 광범하게 생각이 없는 거죠. 2차 대전과 다르게 지금 강대국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계급투쟁도 29년보다 더 강력하게 터져 나을 수밖에 없구요.

이런 점에서 전술적 문제에서는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임금 삭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임금을 삭감하고 책임은 자본과 권력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 안 받아들이겠을 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외부에서 뭘 하자는 거지만 모으는 것, 또 쏠아져 나을 청년 실업자들 조직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들을 해내면서 여러 조건이 결부됐을 때 대중적 전술적으로 갈라서는 것이죠. 하지만 범좌파 집행부? 이런 해결방식을 찾는 것은 최악이고 반장



정종남 다함께 노동팀장

고 붙이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운동이 하늘에서 뚝 떨어 집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운동을 바꾸기 위한 투쟁 과정 속에서 그것에 동의하는 한 세력이 형성되는 것이지,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 예를 들면, 지하철 출신 동지나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동지가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답안을 써 놔는데, 실제 현장에서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가면 이게 진짜 논쟁인데 우리가... **이** 그러면 [혁신을] 하지 말아야 되나? **전** 현장에서 혁신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층의 범좌파 연대라는 대응으로만 귀결되는가 이런 문제제기죠.

사회 이제 올해 1년 동안 비정규직법 개악 등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맞서 어떻게 투쟁하며 혁신을 해야 하는지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공황이 지속될 것이기에 자본과 권력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양보 조치를 하면서 조직 노동자에 대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면해서 투쟁하는 동지들을 묶어 세워야 합니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70~80퍼센트가 벌써 30~40퍼센트 임금 삭감됐고, 금융권과 공기업에 대해서도 왜 내내만 잘 먹고 사냐 라는 공세가 취해질 거예요. 이런 국면에서 이에 대응하는 투쟁 전선을 어떻게 쳐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투쟁하는 노동자들만 묶어 세워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전 지금 세계경제가 초유의 공황입니다. 29년 대공황에서 벗어난 것은 2차 세계대전이러는 아관적 전쟁을 통해서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스럽지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력에게는, 그런데 운동전영은 일국적이예요. 단지 정부를 바꾸면 좀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수준이예요. 그래서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당과 공조를 폐지 못하는 것이죠.

'열심히 싸워보자' 이런 이야기는 정말 광범하게 생각이 없는 거죠. 2차 대전과 다르게 지금 강대국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계급투쟁도 29년보다 더 강력하게 터져 나을 수밖에 없구요.

이런 점에서 전술적 문제에서는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임금 삭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임금을 삭감하고 책임은 자본과 권력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 안 받아들이겠을 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외부에서 뭘 하자는 거지만 모으는 것, 또 쏠아져 나을 청년 실업자들 조직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들을 해내면서 여러 조건이 결부됐을 때 대중적 전술적으로 갈라서는 것이죠. 하지만 범좌파 집행부? 이런 해결방식을 찾는 것은 최악이고 반장

복수노조는 허용되는 과정이 기회일 수 있죠. 제대로 싸우고 조직하면, 민주노총 것 발을 더 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민주노총 바깥에서 혁신하자는 건 선부름입니다. 정부가 그토록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이유는 여전히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에게 의미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CIO 운동처럼 기존 노조가 아래로부터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기층에서 새로운 흐름이 광범하게 생각이 없는 거죠. 2차 대전과 다르게 지금 강대국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계급투쟁도 29년보다 더 강력하게 터져 나을 수밖에 없구요.

이런 점에서 전술적 문제에서는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임금 삭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임금을 삭감하고 책임은 자본과 권력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 안 받아들이겠을 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외부에서 뭘 하자는 거지만 모으는 것, 또 쏠아져 나을 청년 실업자들 조직하는 것입니다.

사회 오렌 시간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신 세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쉽지만 오늘 좌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맘때 서울메트로 선거에서 현장 좌파가 이겨서 다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작년 말에 파업을 철회하면서 사실 탄핵당한 겁니다. 그리고 정연수가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기회가 왔을 때 조합원들 열망을 제대로 반영해 투쟁을 조직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법·최저임금 개악, 구조조정 문제 등에서 투쟁에 나서면서 실추된 명예,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 때만 공조할 게 아니라, 예컨대 쌍용차 등에서 정거파업이 벌어지면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연대를 실제로 조직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파업 만능으로 가서 망한 것이 아니라 맨날 '뺑 파업' 해서 실망시킨 것이 민주노총 15년의 역사입니다. 지금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들은 전혀 전선을 못 치고 있는 상태인데 자본은 각개격파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의 요구는 모든 해고 금지, 임금 삭감 금지 이런 걸로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 빠져나가고 있죠. **이** 이것이 로자 룩셈부르크가 얘기한 대중파업과 민중봉기식으로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도로 가려면 부분 전투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함께하는 전술적 퇴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 현실에서 양보가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대중파업이 벗어난 것은 2차 세계대전이러는 아관적 전쟁을 통해서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스럽지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력에게는, 그런데 운동전영은 일국적이예요. 단지 정부를 바꾸면 좀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수준이예요. 그래서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당과 공조를 폐지 못하는 것이죠.

'열심히 싸워보자' 이런 이야기는 정말 광범하게 생각이 없는 거죠. 2차 대전과 다르게 지금 강대국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계급투쟁도 29년보다 더 강력하게 터져 나을 수밖에 없구요.

이런 점에서 전술적 문제에서는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임금 삭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임금을 삭감하고 책임은 자본과 권력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 안 받아들이겠을 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외부에서 뭘 하자는 거지만 모으는 것, 또 쏠아져 나을 청년 실업자들 조직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들을 해내면서 여러 조건이 결부됐을 때 대중적 전술적으로 갈라서는 것이죠. 하지만 범좌파 집행부? 이런 해결방식을 찾는 것은 최악이고 반장

복수노조는 허용되는 과정이 기회일 수 있죠. 제대로 싸우고 조직하면, 민주노총 것 발을 더 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민주노총 바깥에서 혁신하자는 건 선부름입니다. 정부가 그토록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이유는 여전히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에게 의미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CIO 운동처럼 기존 노조가 아래로부터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기층에서 새로운 흐름이 광범하게 생각이 없는 거죠. 2차 대전과 다르게 지금 강대국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계급투쟁도 29년보다 더 강력하게 터져 나을 수밖에 없구요.

이런 점에서 전술적 문제에서는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임금 삭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임금을 삭감하고 책임은 자본과 권력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 안 받아들이겠을 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외부에서 뭘 하자는 거지만 모으는 것, 또 쏠아져 나을 청년 실업자들 조직하는 것입니다.

사회 오렌 시간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신 세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쉽지만 오늘 좌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담 속기 나지현

좌담 정리 박건희·이현주 기자

노동

‘벼룩의 간’을 빼 먹는 이명박의 비정규직법 개악

4월 국회에서 투쟁으로 저지해야

3월 13일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을] 보호’ 한다며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법도 ‘악법’ 이던 차에 더 개악해 최악으로 만들려 한다.

개악안은 기간제·파견제 노동자들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법 자체를 적용 받지 않고 무한정 쓸 수 있는 단시간 노동의 범위도 주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렸다.

개악안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차별을 심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가 1.9년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노동자들더러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으라는 얘기고, 이참에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다. 비정규직을 더 오래 부려 먹고 필요없으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기업 요구에 충실한”(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 법안인 것이다.

개악안이 워낙 ‘막장’ 안이다 보니 법안을 제출하려는 한나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어 정부가 직접 발의한 것이다.

개악안 발표 후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조선일보〉)나 “일자리의 질을 따지는 것은 사치”(〈중앙일보〉)란다. 경총과 전경련은 개악안을 내심 반기면서 아예 기간과 파견 대상 업무 제한을 없애라고 목청을 높인다.

이명박이 비정규직 죽이기 ‘속도전’을 하는 이유는 경제 위기와 관련 있다.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늘려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과 고통이 정부에 맞선 대규모 저항으로 표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들먹인 “7월 1백만 고용대란설”



2월 14일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 경제위기의 첫 번째 희생자 비정규직을 구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진지한 투쟁 건설이 필요하다.

사진 이미진

조직되지 않은 더 열악한 비정규직에게 먼저 칼을 휘두르지만 그 칼 끝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한 협박이었지만 단순한 과담은 아니다. 이미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자 등을 합한 ‘사실상 백수’는 3백6십만 명에 이른다.

그래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실업자가 2백만 명을 넘으면 폭동과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격정했다.

이들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 기회라도 늘려줘야 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대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악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삭감, 대졸 초임 삭감, 청년 인턴제 확대 등 노동 계급 전반의 희생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조선일보〉는 비정규직법 개악뿐 아니라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현행 노동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은 기자회견에 “결국 이들이 노리는 것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되지 않은 더 열악한 비정규직에게 먼저 칼을 휘두르지만 그 칼 끝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명박의 순차적 공격에 맞선 분산적 대응이 아닌 전면적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단호한 투쟁

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한편, ‘이명박 표’ 비정규직법에 반대함과 동시에 ‘노무현 표’ 비정규직법도 지지해선 안된다.

일각에서는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동안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했다며 ‘노무현 표’ 법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하청용 역업체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위장 정규직’”과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근로 계약을 정규직으로 판단하는 통계”(민주노동당)에 기인한다. 오히려 가장 열악한 용역, 파견, 호출직 등 ‘악성 비정규직’이 증가해 고용의 질이 나빠졌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증가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악법에 반대해 싸웠던 노동·사회단체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지금의 개악에는 반대하지만

기존의 ‘악법’이 “옳았다”(민주당 대표 정세균)고 주장하는 원조 ‘비정규직 죽이기’ 당인 민주당은 신뢰할 수 없는 세력이다. 혹여나 민주당 눈높이로 요구 수준을 낮춰 타협한다면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국회 밖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파괴력 있는 파업과 시위 등으로 ‘돌격’ 할 때만 개악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

‘노무현 표’ 비정규직법 반대 투쟁 당 시처럼 국회 의사 일정에 맞춰 파업과 파업 철학을 지루하게 반복해 스스로 진을 빼는 과정을 재현해선 안된다. ‘뺑 파업’이 아닌 위력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럴 때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립 서비스만 한다’는 비방을 사라지게 하고 진정한 혁신도 이를 수 있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먹튀’ 자본과 시장 맹신 정부가 만든 쌍용차 사태

쌍용차를 국유화해 고용을 보장해야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가 곧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도 쌍용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상하이차 출신인 법정관리인 박영태는 뻔뻔하게도 “채권단은 쌍용차 청산이 유리한 입장”이라며, 대규모 인력감축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쌍용차 회생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상하이차는 2004년에 ‘4년간 1조 2천억 원 투자’를 약속하며 5천9백억 원에 쌍용차를 인수했으나, 그후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기술을 빼가며 “경영권 잃어도 ‘남는 장사’”(〈한국일보〉 1월 10일치)를 했다.

상하이차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렸다. 4년 동안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해 노동자 1천 5백여 명이 해고됐고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등이 이어졌다. 상하이차는 “이윤을 목적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을 망치고 온갖 횡포를 서슴지 않던 ‘먹튀’ 자본의 전형”(쌍용차 노동조합)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매각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을 경고하며 매각 반대 투



1월 22일 쌍용차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사단법인노동자연구소

쟁을 벌였다. 그러나 시장논리를 앞세운 노무현 정부는 매각을 강행했다. 쌍용차 사태는 ‘먹튀’ 자본과 신자유주의 맹신 정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들이 전적으로 사태에 책임이 있다.

쌍용차 노조의 요구대로 정부와 산업은행은 상하이차에 법적 책임을 묻고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2조 원을 자본확충편

드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보내지 말고 쌍용차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다.

쌍용차 노동자 1만여 명과 20만 명에 이르는 협력업체 노동자들, 그 가족들을 거리로 내몰 파산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다른 기업 배반 불릴 ‘제3자 매각’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성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를 만들 능력이 있는 노동자들을 내보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고용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미 쌍용차는 국책사업인 고효율의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을 진행해 왔다.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고 좋은 고용환경을 보장하도록 쌍용차를 국유화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 한 해 12조 원에 이르는 부자 감세액의 일부만 있어도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상하이차가 거둔 부당한 수익도 환수해야 한다.

과잉생산 문제는 쌍용차를 청산하고 노동자를 대량해고하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주간연속2교대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산업은행, 쌍용차 사측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통제하고 파업 대열을 굳건하게 유지하며 연대의 초점을 제공할 수 있는 공장 점거 파업이 필요할 것이다.

은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달’ 시키려 한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조조정에 맞서는 것이다. 최근의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으로 이어질 공격의 시작이므로 효과적인 방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본격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안이 발표되고 전투가 시작되면,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통제하고 파업 대열을 굳건하게 유지하며 연대의 초점을 제공할 수 있는 공장 점거 파업이 필요할 것이다.

쌍용차 투쟁은 경제 위기 시기 고통 전가에 맞선 투쟁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연대 투쟁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

이상우

“비정규직 해고 통한 회사 정상화는 말이 안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이창근 기획부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조업단축과 휴업으로 노동자들이 “막노동이나 택시 운전 등에 나서고 있”으며 “통장이 말라붙었고 법정관리 상황이라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이 안 된다”고 했다.

이창근 기획부장은 “정리해고가 단행되면 노조는 강력하게 반이될 것이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밥그릇·가계 경제·지역 경제의 문제”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35명 해고에 관해서도 이창근 기획부장은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과 함께 살자는 원칙으로 같이 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정상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 정규직 구조조정의 수순 밟기”라고 지적했다. “지지와 연대, 공동 투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나마 규모가 있는 쌍용차 노조가 힘없이 무너지면 다른 사업장에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우리가 먼저 선두에서 열심히 싸우겠다. 전체가 함께 싸우자.”

금속노조는 4월 2일 평택에서 집중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 노동자들은 금속노조가 3월 18일 서울 상경 투쟁 계획을 연기해 4월 2일 평택 집결로 잡은 것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인터뷰·정리 김진석

이명박 언론 장악에 맞선 YTN 노조 파업

탄압을 중단하고 노종면을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비열한 만행을 저질렀다. 3월 22일 일요일 아침 “한 명은 아내와 함께 등산을 가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또 한 사람은 집에서 자다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YTN 노조 조합원 4명을 긴급 체포한 것이다.

노종면 위원장과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이 각각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것은 입단협 조정 결렬에 따른 YTN 노조의 총파업 돌입 하루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지만, YTN 노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간 네 차례 이상 ... 경찰의 출석 요구에 1백 퍼센트 임해 왔”고, 더구나 경찰이 ‘17일 출석 요구서’를 18일에 전달한 것도 밝혀졌다.

YTN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구분홍 낙하산 저지’와 ‘민주언론 사수’를 내걸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 왔다. 그러자 ‘명박스러운’ YTN의 자칭 사장 구분홍은 YTN노조를 ‘업무방해’로 5차례나 고소했고, 검찰은 거기에 더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으로 추가 고소했다. YTN 노조는 이것이 “정권 차원의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구분홍이 온 후 호텔 비용, 용역 비용 등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회사 회의비가 지난해보다 열 곱절이나 늘어났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민주언론 사수’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한 YTN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YTN 노조의 파업이 언론약법과 MB약법에 맞서는 3차 투쟁을 촉발하고 나아가 “제2의 촛불”로 번질까 봐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23일 YTN 노조 조합원들은 무려 90퍼센트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며 파업의 포문을 힘차게 열었다.

그러자, 24일 법원은 4명 중에 노종면 위원장 구속을 결정했다. 장자연 리스트 수사는 진척이 없는 데 YTN 노조 탄압은 전광석화 같다.

YTN노조는 “우리에게 4백6명의 노종면이 있다”며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도 노종면 석방을 촉구했고, 언론노조는 ‘연대

파업 등으로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지지와 연대가 확산돼 YTN 파업이 승리하면, 그것은 언론약법과 MB약법에 맞선 투쟁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조민호



3월 24일 회사 로비에서 파업 집회를 벌이고 있는 YTN 조합원들 사진 이미지

《민주노총 충격보고서》와 민주노총 탈퇴 물결?

민주노총 때리기에 눈이 벌개진 우파들

보수언론과 우파들이 민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조합원이 35명뿐인 화학섬유노조 울산지부 NCC지회는 서울플라자호텔까지 올라와 민주노총 탈퇴 기자회견을 했고 인천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진행했다.

때를 맞춰 ‘뉴라이트신노동연합’이 만든 《민주노총 충격보고서》가 발행됐다. 뼈아픈 잘못들도 지적했지만 엄청난 과장으로 가득 차 있고 기본적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 이 책들 <매일노동뉴스>는 “너무 영성해 ‘충격적인’ 뉴라이트보고서”라고 했다.

조합원 30여 명인 영진약품지회의 노사화합선언식에는 ‘뉴라이트신노동연합’ 핵심 관계자가 참석했고, 정부도 세부조사를 유예하겠다고 회유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탈퇴 시도와 관련된 노조(현대중공업, 인천지하철, 코오롱, 서울메트로) 위원장 4명이 <서울경제신문> 좌담회 후에 가진 술자리에 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사실도 밝혀졌다.

해체돼야 할 것은 뉴라이트

우파들은 인천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기대를 걸었을 것이다. 인천지하철노조는 2004년 파업으로 주요 활동가들이 구속되고 해고됐다.

인천지하철노조 이성희 위원장은 민주노총 탈퇴를 조합비 인하, 외부회계 감사 실시 등 조합원들이 솔깃할 내용과 섞어서 투표에 부쳤다. 투표 직전에 인천시장 안상수는 “노사화합이 지속되면 2호선 운영권을 인천지하철 공사에게 주겠다”며 개입했

다. 그러나 다행히 인천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건은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탈퇴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와 노사화합 선언을 이끈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정연수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대구지하철·광주지하철 노조 등과 함께 민주노총을 탈퇴해서 “새로운 총연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연수 위원장의 주장은 서울지하철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크지 않다. 송현송 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은 “제3노총 운운에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노총이 정치적이었지만 정연수는 이명박 지지자고 그와 함께 노조를 이끌던 배일도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됐다. 정연수가 사무국장이던 배일도 집행부 시절에 조합비로 안마시술소를 다니다가 회계감사 때 지적당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탈퇴 투표가 부결될 것이 뻔해서 정연수는 내년 복수노조를 겨냥해 자기 세력만이라도 데리고 나갈 속셈일 것이다.”

그러나 3월 23일 기흥전자, 강남성모병원 등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의 과오와 잘못을 이용해 민주노조운동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으려는 자들에 맞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선두에서 민주노총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철구

맑스주의로 세상 읽기

대중매체는 전능한가?

존 몰리뉴 영국 포츠머스대학 교수.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



존 몰리뉴는 저명한 영국의 맑스주의자로, 특히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맑스주의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한국에서 그는 ‘다함께’에서 발행한 신문 <맞불>과 <저항의 촛불>에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칼럼을 연재해 왔다.

‘다함께’와 컨텐츠 제휴를 맺은 <레프트21>은 기존의 존 몰리뉴 칼럼들을 인수해 온라인에 두었고, 새로 창간된 <레프트21>을 위해 칼럼을 써줄 것을 존 몰리뉴에게 부탁해 고맙게도 허락을 받았다. 존 몰리뉴 칼럼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편집자

어디서나 사회주의자들이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대중매체의 압도 다수가 사회주의를 적대시하고 자신의 강력한 영향력을 이용해 현상 유지, 즉 자본주의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때때로 이런 편향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대다수 독재 정권 치하의 대중매체나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미국의 <폭스 뉴스>는 단지 자본주의뿐 아니라 현 정부를 지지하는 선전 매체 노릇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런 편향이 더 미묘해서, 영국의 BBC처럼 공정성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거나 다양한 관점을 대변하는 척 행세한다. 그러나 항상 근본적 태도는 똑같다. 즉, 자본주의는 합리적이고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생산 조직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기껏해야 괴짜이거나 아니면 심중팔구 사악한 ‘과격파’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온건파’는 좋고 ‘과격파’는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자본주의 폐지를 원하는 사람은 용어의 정의상 과격파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대중매체인 TV를 보면, 이런 근본적 태도가 뉴스 보도뿐 아니라 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 선정, 다큐멘터리의 주제와 해설, 연속극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오락 프로그램의 성격과 분위기, 요컨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그들의 견해는 무엇을 보도하는가 하는 데서 맨 먼저 드러나고 무엇을 보도하지 않는가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다. 그뿐 아니라 어떻게 보도하는가, 사실과 칼럼 등에서 뭐라고 논평하는가 하는 데서도 드러나고 심지어 만평이나 스포츠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영화 산업이나 라디오나 그 밖의 대중매체에서도 근본적 태도는 다르지 않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중매체는 소수가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통 형태다. 대중매체는 모두 상당한 자본 지출이 필요하고, 따라서 막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 — 자본가들 — 이나 근본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의 친(親)자본주의 편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필연적이다. 그것은 지배계급이 이데올로기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현상의 일부인데, 칼 맑스는 (현대적 대중매체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던) 1845년에 그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설명한 바 있다.

어떤 시대에도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다. 즉,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적 세력인 지배계급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적 세력이기도 하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이 정신적 생산수단도 통제한다. 따라서, 대체로 말해서, 정신적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사상은 그것[물질적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에 종속된다.<독일 이데올로기>

따라서 문제는 대중매체에 대한 지배계급의 통제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그런 통제력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자. 사회주의자들이 독자적인 소통수단, 즉 <레프트21> 같은 신문이나 포스터·리플릿·잡지·웹사이트·블로그·영화 같은 각종 소통 수단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과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자본주의 매체에서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존속하고 자본가 계급의 권력이 유지되는 한은 사회주의 매체가 부르주아 매체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주의 교육이 국가의 초중등 학교나 부르주아 대학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사회주의 사상은 주변적 영향력 이상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정적인 문

제는 부르주아 매체가 근로 민중 다수의 정신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지배력을 어떻게 분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분명히 대중매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영향력이 있고 때로는 그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을 선동하고 더 나아가 전쟁의 광기를 부추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체제에 대한 도전을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회에는 대중매체가 선전하는 세계관을 대부분 거부하는 사람들이 (소수나마)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그런 소수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지배적인 세계관을 (아직)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나도 그중 일부이다) 근본적으로 또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체제에 의문을 품게 된 것은 단지 우리가 겪은 경험들 때문이다.

둘째, 대중매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압도 다수조차 그런 주장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믿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20세기 내내 대다수 신문이 보수당을 지지하고 극소수만이 노동당을 지지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당이 여러 차례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난해 미국에서도 대중매체의 압도 다수는 월스트리트를 지원하기 위한 부시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금융 방안을 지지했지만, 그럼에도 그 방안은 광범한 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려 애써 봐야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대중매체 스스로도 잘 아는 매우 인기 없는 쟁점들이 있다. 예컨대, 대량 실업이 그렇다. 때때로 지배계급은 대량 실업이야말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계급의 저항을 분쇄하기에 딱 좋은 처방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지배계급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종의 속죄양(이주노동자들, 난민들, 탐욕스런 노동조합원들 등)을 비난하도록 몰아가는 것이지만, 항상 지배계급은 실업을 격정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대체로, 현실이 대중매체의 주장과 가장 심각하게 어긋나고 특히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과 직결된 쟁점이 불거질 때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가장 약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가 사회주의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의 고통으로 급진화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경제 위기로 자본가 계급 자신들의 주장이 극적으로 폭로되고 허물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로 민중이 대중매체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거부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경우는 그들이 집단적 투쟁을 벌일 때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그들 자신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그들 자신의 행동과 경험이 거짓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집단적 투쟁이 대중 투쟁이기도 할 때, 집단적 투쟁이 압도 다수의 노동계급을 행동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할 때, 예컨대 총파업 투쟁이 벌어질 때,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정말로 붕괴하기 시작한다. 특히, 노동계급이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충만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위기 상황과 대중 투쟁의 결합뿐 아니라 한 가지 요인이 더 필요하다. 사회주의 세계관을 대안으로 주장할 수 있는 독자적 매체를 가진 혁명적 노동자 대중 정당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완성하면, 우리는 근로 민중의 정신에 대한 대중매체의 지배력뿐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권력 전체 — 대중매체에 대한 지배력을 포함한 — 도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또다른 살인

사형 집행 부활은 MB의 사회통제 시도

“윤수야, 제일 두려운 게 뭐지?”
“..... 아집이요.”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중)
강호순 사건 이후, 법무부는 사형제 유지 찬성이 64퍼센트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1년 만에 사형집행 재개를 고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서 현재 59명인 사형수들은 매일 공포스러운 아침을 맞고 있다.
사형폐지 운동을 주도하며 사형수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강호순 사건 나니까 사형선고 받은 죄 00가 초죽음이 돼서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찬송가를 4절까지 부르는 사형수, 1초라도 벌려고 가다가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신는 사형수, 생애 마지막 공기를 마시려고 창살 사이로 폐가 찢어질듯 숨을 들이키는 사형수... 사형집행관들이 전하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런 증언들을 보며 사형 찬성에서 반대로 “전향”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 박준선을 비롯한 사형 찬성론자들은 “사형제도의 위하력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제는 흉악 범죄 발생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UN은 1988년과 2002년 두 차례 사형제와 살인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했고 사형제가 살인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은 근거없다고 결론 내렸다. 캐나다의 경우,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에 비해 사형을 폐지한 뒤 오히려 살인율이 44퍼센트(2003년 기준)나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미성년자까지 사형 집행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살인이 연간 10만 건 이상 벌어진다.

오심이나 정치적 목적, 하층민에 대한 편견이 억울한 죽음을 낳을 개연성도 사

사형제는 범죄를 예방하지도 못할 뿐더러 범죄의 원인을 그저 범죄자 개인의 심리나 심성으로 돌리는 효과를 낼 뿐이다.

형을 폐지해야 할 중요한 이유다.
군사독재 정권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미국에서도 1973년 이후 1백7명의 사형수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석방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처형이 임박해 풀려났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이 13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2000년에 사형 집행 유보를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이론상 사형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집행에서는 약하고 가난하며 지식이 없는 소수인종에게 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팻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형제도 폐지 만평집 《이젠, 원사페로》에 실려 있는 성덕환의 만평
제공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정치적 이용의 역사
사형제가 살인을 막지도 못하고 오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왜 이 정부는 사형 집행을 부활시키려 할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는 이명박 정부가 사형 집행 부활 논의를 다시 부추기는 이유에 대해 “‘누구누구를 죽였다, 기강을 잡겠다’면서 정권이 코너에 몰릴 때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사형제의 역사는 정치적 이용의 역사다. 사형선고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면서 경찰력 강화와 사회 통제를 합리화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에서는 1970년 이래 살인·강도와 무관한 정치적 신념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사형당한 사람이 전체 사형의 5분의 1이나 된다. 청와대 이메일 파문은 강호순 사건이 정권의 위기 뒤통이에 이용됐음을 보여 줬다.
김형태 변호사는 노태우 정부가 벌인 ‘범죄와의 전쟁’ 첫 사례인 ‘양평 암매장 사건’도 사회를 찍어누르려는 정권의 목적에 이용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주범은 경찰의 총에 맞아 이미 죽었고, 공범들은 살인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은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보름 만에 사형을 선고했다.
근본적으로, 사형제는 범죄자 개인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범죄의 진정한 근원을 가린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범죄자들이 타고난 ‘사이코패스’라며 사형제를 옹호한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이 체제가 범죄를 낳는다.
사형수의 압도다수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가난과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다. 사형수 대부분이 돈이나 복수심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국민일보》, ‘사형수 63인 심층 리포트’) 살인은 이런 누적된 소외와 억압의 결과로, 대부분은 우발적으로 벌어졌다.
사형제는 인간이 변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사형수들을 직접 만나 온 종교인, 변호

사, 교도관 들은 많은 사형수들이 자신들과 진심으로 대화하려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점점 변한다고 증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석방이나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재소자들의 교정 정도에 따라 감형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 ‘절대적 종신형’도 위헌이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은 정작 피해자 가족에게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기자와

“이론상 사형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집행에서는 약하고 가난하며 지식이 없는 소수인종에게 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만나기 전날 범죄피해자가족모임에 다녀왔다는 이영우 신부는 “언론에서 반쪽 피해자들 얘기하다가 홍보 효과 없으면 금방 폐기처분돼요. 정작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해 주는 것은 없어요” 하고 말했다. 정부가 진정 해야 할 일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어루만져 주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낳은 소외와 불평등은 자금심 없고 가난에 찌들리고 복수심으로 가득찬 사람들을 계속 양산할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는 범죄를 예방하지도 못할 뿐더러 범죄의 원인을 그저 범죄자 개인의 심리나 심성으로 돌리는 효과를 낼 뿐이다. 범죄가 진정으로 근절되길 바라고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사형 집행 부활 시도는 물론이고 사형제에 반대해야 한다.

최미진 기자 | lionady@left21.com

송재혁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 기고

학교를 시장으로 만드는 2MB 교육정책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시장화 전략을 실현하다가 저항에 부딪치면 주춤거리며 주변을 살피기라도 했다. 반면 2MB 정권의 신자유주의 파시즘은 앞과 옆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며 달렸다. 굴욕적 외교와 살인적 입시교육 비판을 핵으로 한 거대한 촛불 반란을 목도하고도 ‘사이코패스’처럼 그냥 밀고 나갔다.
그가 그동안 한 일을 돌이켜보자. 대입 자율화, 고교다양화, 교육정보 공개, 일제고사, 교과서 수정... 한국 교육에 시장화와 보수화가 물결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시장화 시스템을 현장에 안착시키려 한다. 그 핵심 장치가 교원평가다. 교육청평가, 학교평가, 학생평가 등 모든 평가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교원을 길들이려는 족쇄다. ‘국가의 원손 [전교조]을 길들여야 시장으로서의 학교가 원활히 기능할 것임을 저들은 안다. 이명박식 ‘평가’는 교육 성



일제고사 반대 광주전남 지역 교사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 사진 출처 전교조 전남지부

과를 점점하여 피드백하는 아름다운 교육 과정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저소득층 교육복지, 중학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서 실질적

교육복지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교육 각 부문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교육악법(교원평가법, 교원노조법, 교육세폐지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악법 도입에는 민주당도 일정 부분 공조하고 있다. 교육정책들은 민중을 도탄으로 몰아

가고 있다. 시험 중압감으로 인한 학생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인생 초년기에 삶의 고달픔과 스트레스로 늙어간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과도한 경쟁주의는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원의 2008년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다.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 위기 당시에 달리 사교육비는 늘었다. ‘2008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퍼센트(사교육 미참여 학생도 포함), 7.6퍼센트(사교육 참여 학생만) 인상됐다. 특히 두드러진 부분이 초등학교 영어다. 정부의 무분별한 영어교육 몰입 정책(‘영어몰입교육’이 아니라)이 가져온 결과다.

교육시장화는 이기주의에 근거해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훼손은 심각하다. 자사고, 국제중 등 학교 다양화와 서울의 학교선택제로 평준화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사회귀족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메뉴가 정착돼 교육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일제고사와 교육정보 공시를 통한 경쟁 체제는 허울뿐인 교육의 양상한 기둥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외국인학교는 영리학교의 교두보다.
학교에서는 주요 과목 위주의 보충수업이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고, 학생들을 경쟁의 필드에 몰아넣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전교조의 단체협약은 효력 소멸을 앞두고 휴직조각 취급받고 있다.
교육시장화는 이기주의와 선택의 권리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공공성 논리로 맞서나가야 할 것이다. 학벌사회를 유지하는 대학서열구조에 대한 협박을 사회적 의제로 던져야 하며,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한다.

agora@left21.com

레프트21 아고라 | 4월 7일(화) 오후 5시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기고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토론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프트21 아고라 편집자가 독자에게

창간호가 발간된 후 레프트21 아고라에 많은 독자들께서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신문 기사에 대한 의견, 현실에 대한 고발, 삶과 운동 속에서의 경험, 운동 내 쟁점에 대한 견해 등 정말 다양한 내용의 글이 도착했습니다.

편집자로서는 모든 글을 지면에 실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면 제약 상, 이번 호에는 여섯 개 글을 선별·축약해 실었습니다.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글과 지면에 실린 글이라도 축약되지 않은 원문은 웹사이트에 게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자들의 기고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그중 편집자가 선별·축약해 신문 지면에 게재할 것입니다. 독자들의 더 활발한 기고를 통해 레프트21 아고라가 생생한 토론 광장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레프트21 아고라 편집자 정병호

〈레프트21〉 창간호를 읽고

개인적으로 가장 속이 시원했던 기사는 13면의 ‘갈 길을 보여 준 급속노조 경주지부와 인지컨트롤스지회’ 기사였습니다. 최근 언론에 민주노총 성폭력 은폐 같은 비리 소식과 일부 단위 사업장의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에 관한 소식이 많이 보도됩니다. 주변에서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기사를 읽고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단호하게 싸우는 사업장의 소식과 급속노조의 연대 행동은 제목 그대로 민주노조가 갈 길을 보여 줬습니다. 민주노총의 비리는 문제지만,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마찬가지 비중으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편파 보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위기와 혁신 논란’ 기사는 사태를 좀 더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호썸 엘하말라위 칼럼을 읽으면서,

〈레프트21〉이 서로 다른 공간의 활동가들을 연결 짓는 네트워크 구실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이집트 노동자 운동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가능성을 생생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회주의자가 노동계급에 뿌리내리고 중요한 파업 투쟁 지도자들을 서로 연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3면의 ‘신영철은 물론이고 이용훈도 사퇴해야’ 기사는 제목에 대한 근거가 기사 본문에서 너무 양상했고, 기사 내용에 비해 제목이 과도했다고 보입니다. 저는 대법원장도 대법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법관의 실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을 보면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통제를 뛰어넘는 인물로 보여서 이용훈에게 얼마큼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할지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용훈도 신영철 비리에

연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는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정도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추측성 의혹만으로도 ‘이용훈도 사퇴해야’라는 제목을 뽑은 것이 적절했을까요? 오히려 논설에서 밝힌 다음의 근거가 기사에 포함됐더라면 제목에 비춰 적절하고 더 설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용훈도 지난 2월 삼성 사건에서 수수 의견을 제기한 특정 대법관을 심의 과정에서 배제하고 삼성 사건을 재배당했다. 신대법관의 촛불 사건 개입과 본질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 둘 모두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레프트21〉이 독자들에게서 더 광범한 지지를 얻으려면 분명하고 타당한 근거에 입각해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연수

못내 아쉬운 진보신당 강령

3월 초, 진보신당이 당 강령 초안을 공개했다. 진보신당은 강령에서 신자유주의와 전쟁, 불평등, 차별, 소외와 억압에 대한 반대를 명시하고 대안들을 제출했다. 특히 최근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재벌천국·서민지옥 정책으로 인해 진보진영에서 행동강령적 요구로 제출되고 있는 은행 국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 금융 통제, 친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을 중요하게 다룬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기대한 것에 비해 아쉬움이 크다. 진보신당의 당 강령은 전체적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특히 “만남의 공동체”, “참된 나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유된 이상에 따라 하나의 공화국을 형성하는 것” 같은 표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강령에서 밝힌 대안과 목표를 어떻게, 어떤 사회세력을 통해 이를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결여돼 있다.

현재 진보신당의 지도부들은 알다시피 민주노동당의 초기 지도부를 구성한 사람들이다. 민주노동당의 당 강령 작성에는 역시 이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진보신당의 강령은 앞서 지적한 모호함과 추상성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강령이 표현한 “생산수단의 사회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

주적 사회경제체제 건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같은 급진적 대안에 비춰 볼 때 오히려 후퇴한 듯한 인상을 준다.

진보신당의 당 강령에서 자본주의를 뛰어 넘거나 대체하려는 이상과 원칙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동강령으로는 꽤 쓸모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월 28일에 있을 당 대회에서 현재 강령보다 더 진일보한 강령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령으로 제출한 요구들을 위해 진보신당이 지금보다 더 대중운동을 건설하고 진보정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

최민혁

‘촛불 재판 외압 파동’ 기사에서 아쉬운 점

‘촛불 재판 외압 파동’ 기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법부는 대중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이 사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배심제 전면 도입, 법관 인사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등 민주적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민주적 사법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같은 부당한 재판 개입과 판결, 관료주의적 인사 체계 등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사법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근본적으로 가진 자들의 권력과 이해관계를 옹호하므로 민주적 사법제도가 갖는 한계도

동시에 지적해야 한다.

사법부는 군대와 경찰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일부다. 국가기관들은 모두 엄격한 위계적 질서이고 상층부의 통제를 받는다.

애초 대법원장 이용훈이 이 사건을 두고 “(이메일을) 압력으로 느낀 사람은 판사의 자질이 없”다며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 점은 사법부 체계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은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애기”라며 감쌌다.

경제 권력을 지닌 자들이 정치 권력도 쥐고 있다. 예컨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된 삼성에버랜드 사건(이건희 전 회장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을 지난 2월 18일 구성된

새 재판부에 다시 배당했다.

2007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최근 5년 이내에 개입한 판사 출신 변호사 5백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조사결과에서 5명 중 1명꼴로 사회·경제 권력의 압력으로 재판에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은 배심원의 유·무죄 판결을 판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배심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지만, 흑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백인보다 훨씬 높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자본주의의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다.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소수의 가진 자들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와 이해에 바탕한 근본적 사회변혁이 필요하다. ‘촛불 재판 외압 파동’ 기사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김은영

오바마의 대한반도 정책은 전임자의 것과 판이하게 다를 것

오바마 주변에 포진한 클린턴 사람들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를 표본으로 대북 정책을 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 벌인 키리졸브 한미 북침연습이나 남한 정부를 비호하는 듯한 힐러리의 발언을 두고 부시의 전철을 밟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해는 간다. 그러나 오바마는 네오콘의 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대북 강경책을 쓰는 시능을 해야 할 처지다.

[미국은] 경제가 바닥이라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없고, 어떻게든지 평화적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고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 문제, 휴전협정, 북미관계 개선 등 산적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괄 타결 청사진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윤아

‘미디어발전국민위’가 언론악법 폐기 투쟁의 보조 수단일까?

장호중 기자와 인터뷰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권한도 명시하지 않고 …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을 위한 법개정에 면죄부”라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인터뷰 이후 언론노조 입장은 ‘참여’로 선회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논의기구를 통해 MB 악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들어가 언론의 공공영역 확대와 언론자유가 보장될 수 있게 힘을 다해 건인(〈언론노보〉 3월 18일치)”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미디어발전국민위’(이하 국민위)에서 한나라당을 견인할 수 있을까? 민주

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은 1백 일간 논의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였다. 또, ‘국민위’는 논의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합의기구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악법 폐기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자리 매김해야” 한다는 장호중 기자의 논평은 부적절하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라는 장호중 기자의 적절한 코멘트 다음에는 “(1백 일 동안) 치열한 보도 투쟁과 함께 거리로 나가 시민과 네티즌들의 손을 잡고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최상재 위원장의 호소를 다시금 강조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

최영준

재판 전 구속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편지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지난 2월 27일 구속돼,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한국군을 파병해 미국의 만행을 도왔지요. 게다가 이명박은 ‘자이툰 부대는 기름벌 위에 떠 있다’고 망발을 하는 등, 한국 지배자들은 파병으로 이익을 추구하기에 여념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분노했고, 긴 고인 끝에 힘 있는 자와 가진 자를 위한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같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불구속돼 재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2월 27일 검찰이 별안간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 갑작스레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재판 전에 구속한 건 3년 만의 일입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90퍼센트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명박 정권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사실상 ‘백지화’했지요. UN인권이사회에 약속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이처럼 가볍게 뒤집어 버리니,

저 같은 병역거부자를 이 정권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상 밖의 구속이라 솔직히 충격이 컸습니다.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들어갈 때 심정은 뭐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 취침시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감방에 누우니, 참으로 시간이 더디 흐르더군요. 특히 철창살을 사이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를 마주할 때는 누군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자기 나름의 소신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는 3평 남짓한 감방에서만 허용되나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를 감옥에 가렸지만, 제 의지는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소신을 지키며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2009년 3월 19일

영등포구치소에서 김영익

추신)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4월 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원 306호입니다. (사건 번호: 2009고단634)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정성진 엮음, 책갈피)

마르크스주의로 세계 경제 위기 설명하기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까?” “케인스주의가 1930년대 대공황을 끝내고 전후 호황을 가져왔는가?” “금융 자본이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인가?”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은 이 질문들을 화두로 한 책이 나왔다. 경성대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 특성화 대학원인 정치경제학과와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정성진,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 크리스 하먼,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에 대한 탁월한 분석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로버트 브레너 등의 논문과 대담을 담고 있는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책갈피)가 그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케인스주의가 1929년 대공황을 끝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크리스 하먼은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케인스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경제학자들을 통렬하게 논박했지만, 그 자신의 제안도 대공황을 끝낼 수는 없었다. ... 그는 자본가들이 단기적으로 이윤에 타격을 줄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정책에도 등을 돌릴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196쪽)

1930년대 당시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정부 지출이 56퍼센트 늘어나야 하는데, 케인스의 ‘점진주의’와는 다른 이런 정부 지출은 자본 도피, 수입 증대, 경상수지 적자, 금리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크리스 하먼은 아이젠하워의 말을 인용해 1930년대 대공황을 끝

낸 것은 “케인스의 공로라기보다는 히틀러의 공로”라고 지적했다.

1930년대의 상황과 뉴딜정책의 실패, 그리고 결국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대공황이 끝났다는 역사적 사실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뉴딜정책의 운명을 예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연준(FRB)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부시와 오바마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천문학적돈을 퍼붓고 있지만 위기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위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한 뉴욕 대학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앞으로 주책 8백만 채가 더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데, 2009년 1월까지 압류된 주책 건수가 1백만 채에 지나지 않아 이번 위기가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기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또 미국발 위기가 전 세계를 거쳐 다시 미국에 영향을 미치자 오바마 정부는 시티그룹과 AIG를 국유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실상은 국가가 경제에 전격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하먼은 1930년대의 대공황과 비교해 오늘날의 위기에는 “정부 지출 비중이 더 커졌고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빨리 돈을 풀 태세가 돼 있”기 때문에 “일정선 밑으로 경제가 추락할 수 없게 막아 주는 안전판”(199~200쪽) 구실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1930년대와는 달리 주요 기업들이 훨씬 비대해졌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커졌다”(200쪽)고 그는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경제 개입이 경제를 회복시키기는커녕 규제금융 자금이 실물경제로 방출됨으로써 인플레이를 야기하고 뒤이어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에서 그려진 벽화. 혼란스런 신문 헤드라인 사이로 한 남자가 서가에서 《자본론》을 꺼내들고 있다.

이번 위기에 대처하는 데 중국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로버트 브레너의 말을 곱씹어 봐야 한다. 그는 “중국의 위기는 보통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296쪽)이라고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중국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운명에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다. 로버트 브레너는 “중국의 거품이 꺼지면 소비 수요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것”(297쪽)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성진은 이번 위기가 “1970년대 이후 이윤율 장기 저하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태”(274쪽)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마르크스의 공황론, 특히 《자본론》 3권의 이윤율 저하 이론, 잉여가치 생산과 실현의 모순 이론, 산업순환 과정에서 실물 자본과 화폐자본 축적의 모순 이론, 가공자본 이론 등이 오늘날 세계 경제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무기”라고 주장한다.

이번 위기의 발단이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추적한 장시복의 글도 현 위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또 현재 위기를 이윤율 저하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크리스 하먼과 짐 킨케이드의 논쟁도 읽어볼 만하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분석하는 데서 이 책이 지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번 위기가 “금융 규제의 미비나 금융자본의 탐욕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211쪽)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현 위기의 대가를 대중에게 떠넘기려는 지배자들의 시도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위기에 대한 대안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돼 줄 것이다.

이정구 경성대학교 연구교수



검정치마 [201] (루비실통, 2008)

록음악 본연의 재미, 검정치마

지난 2008년 11월 첫 앨범 [201]을 발표한 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디팝 밴드 검정치마는, 이 데뷔작을 통해 이제껏 국내에선 좀처럼 접하기 힘들던 형태의 펑크록을 들려준다. 영미권의 멜로디컬한 기타팝과 트렌디한 개러지 펑크를 잘 이해해 감각적으로 편곡한 이들의 음악은, 그래서인지 ‘한국 음악 같지 않게 세련된’ 틀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검정치마의 음악에는 70년대 뉴욕 펑크나 90년대 캘리포니아 펑크씬을 환기하는 복고적 색채가 녹아 있으면서도, 더 좁게는 90년대 중후반 이후 홍대에서 발현한 ‘조선펑크’나 ‘모던 록 1세대’의 영향도 짙게 배어 있다. [201]의 수록곡 중 “Kiss And Tell”, “상아”, “Avant Garde Kim”과 같이 간들거리거나 꽤 익숙한 가락처럼 들리는 곡들이 그렇다.

허나 그럼에도 검정치마는 한국 인디씬의 ‘지배적 정서’라 할 수 있는, 말랑말랑하고 나긋나긋하며 소녀적 감수성이 듬뿍 묻어나는 ‘주류 한국 인디’와는 조금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이를테면 대중적이면서도 꽤 ‘개혁신적으로 들리



검정치마 공연 모습

는’ 음악색을 불어넣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밴드의 리더 조휴일은 자신의 자유분방한 보컬과 편곡 방식을 잘 활용하고 있고, ‘영어로 쓰고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노랫말과 그 발성도 새로움을 더한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음반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인디팝을 충실히 복습한 한국음악’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타이틀곡 “좋아해줘”를 비롯해 “Antifreeze”의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는 좀처럼 한국 인디에서 듣기 힘들던 실루엣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인기곡 “강아지”의 파워팝 사운드도 유독 산뜻하

게 들린다. 블루스록이 가미된 “Stand Still”이나 슈게이즈 팝넘버 “Tangled” 등의 곡들도 완성도 있게 다가온다. 이렇게 이들의 음악은 ‘감성(만)으로 축축이 젖은’ 국내의 주류 인디 음악들보다 한결 가볍고 정제된 느낌으로 록음악 본연의 재미를 제공한다.

검정치마는 한국의 록도 충분히 다양한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동시에, 예쁘장하고 감수성 짙은 음악만이 아니라 좀더 다채로운 음악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뭐든 경쟁적으로 팔아야만 존속할 수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문화시스템에선 다양성과 창조성보다 선정성과 상품성이 환영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지한 음악애호가라면, 다채로운 예술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변화의 중요성을 고민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와 욕구)는 진정한 다양함이 인정될,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와 평행선을 긋지 않는다.

김영진



《슬럼독 밀리어네어》(대니 보일 감독)

퀴즈쇼로 본 인도 사회

어떻게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빈민가 출신의 ‘차이 월라’ (차 심부름꾼) 청년 자말이 교수·변호사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맞춰 2천만 루피를 따기 일보직전까지 가게 된 것일까?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 자말, 자말의 형 살람, 자말의 일생의 사랑인 라티카의 얘기를 펼쳐 보인다.

자말, 살람, 라티카는 모두 반무슬림

대학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구걸로 시작해 좀도둑질과 작은 사기 행각까지 벌인다. 이 영화는 이들이 처한 끔찍한 환경뿐 아니라, 인도 정부와 엘리트들의 무능, 탐욕, 폭력성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억압받는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고, 이 영화는 끝까지 낙관적 분위기를 잃지 않는다.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진정한 현대적 동화다.



《도쿄 소나타》(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실업으로 파괴된 가족

도쿄의 한 회사에서 하급 관리직으로 일하던 류헤이는 어느날 해고된다. 이 사실을 감히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었던 류헤이는 매일 아침 양복과 넥타이를 입고 집을 나선다.

그는 일자리 소개소에서 모욕을 당한다. 또, 이런 거짓된 삶에 익숙해진 한 친구와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몇 시

간 동안 줄을 서기도 한다. 류헤이의 고통과 혼란은 아내와 두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 모두 파멸·자기 성찰·재기의 과정을 거친다. 《도쿄 소나타》는 때로는 조용한 코미디이고, 때로는 가슴아픈 이야기이며, 때로는 기괴하기도 하다. 《도쿄 소나타》는 매혹적인 영화다.

칼럼/논설

박상표 칼럼

촛불로 막은 ‘쇠고기 전면 개방’, 한미FTA 재협상으로 무너진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광우병 각설이 타령’이 들려온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광우병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허어 미국 쇠고기가 들어간다. F자 한 자나 들고나 보니, 한미FTA 선결조건 30개월 이상 쇠고기 보이누나.”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쇠고기와 자동차를 빨리 선물로 가져다 바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미FTA를 미국 의회에서 비준하려면 쇠고기와 자동차 재협상이라는 일종의 통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가 완전히 무력해질 위험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18일 미국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쇠고기 수입 조건 협상을 급히 마무리 지었다. 수입을 금지했던 30개월 이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풀어 줬고, 광우병 위험 우려가 제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했다. 분노한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폐기하라며 촛불을 들고 저항했다. 전 국민적인 항쟁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두 차례 대통령 사과를 하고 추가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입업자들과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민간자율 방식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한시적으로 수입한다는 미봉책이 나

온 것이다.

그런데 경기 침체를 넘어서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미국 축산업계는 유가, 곡물가 등 원료 가격 상승과 미국 내수 용·수출용 쇠고기 판매 부진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미국 축산업계를 장악한 타이슨 푸드, 카길, 스위트프트 등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은 광우병 위험 때문에 수입이 중단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미FTA를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호재로 여기고 있다.

한국은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5만 7천2백67톤 수입했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모는 멕시코(39만 6천65톤), 캐나다(15만 4천7백98톤), 일본(7만 4천1백19톤)에 이어 세계 4위다. 한국의 수입량은 고작 6개월치기 때문에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뛰어 오른다. 미국 축산업계를 더욱 고무시키는 일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 실현되지 않으면 미 상원에서 한미FTA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촛불 교훈을 무시하는 MB

지난해 촛불 정국에서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대만 등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한국과 비슷하게 완화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동아시아 국

가들은 2009년 3월 현재까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수입조건을 2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 측 관변과학자들은 광우병이 5년 내에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질병이라고 예언했지만,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두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몇 달 전 광우병이 발생했다. 지난 3월 6일에도 스페인 북부의 항구도시 산탄데르에서 26세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

역주행으로 악명 높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지탄받는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미FTA 체결에 목을 매달고 있다. 만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해 촛불시위의 교훈을 무시하고 또다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한다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제2의 촛불시위를 불러올 것이다. 2009년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쥐잡기 촛불 타령’이 들려올 것이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촛불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허어 광우병 쥐잡기 들어간다. M자 한 자를 들고나 보니 쥐뿔과 쥐악이 보이누나.”

자이 자일스 웡파콘 칼럼

새로운 타이 민주화 운동

자이 자일스 웡파콘 타이 출라롱코른대학교 정치학 교수 /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불과 5년 전, 타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가 강력저력 보장되고 사회운동 단체가 빈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시민사회가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에는 약점이 있었다. 당시 탁신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과 남부에서) 엄청난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 오늘날 타이는 전체주의가 되고 있다.

이름과 달리 매우 비민주적인 ‘민주당’ 정부는 2006년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의 힘을 빌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부는 아버지하고 편집광 같다.

민주당 정부의 우선순위는 ‘국왕모독죄’를 이용해 저항세력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 정부는 방송과 지역 라디오방송들을 검열하고 시민들이 서로 고발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 넣으려 한다. TV와 신문들은 이미 군부와 손발을 맞추고 있다.

사법부는 독재의 시녀가 돼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정당을 계속 해산시키고 있다. 판사들은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법정모독죄’로 감옥에 넣겠다고 위협한다.

언론들은 국왕모독죄 재판 소식을 보도하지 않는다. 투명성·공정함·표현과 학문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왕정이 자유와 인간 존엄성 실현 가로막아

나는 2007년초 《부자들을 위한 쿠데타》를 출판했다. 당시 나는 타이에서 민주적 공간이 줄어들는 데 항의해 이 소책자를 썼다. 나는 이 책에서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탁신 정부를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탁신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됐

국왕은 단 한 번도

타이 민주주의 파괴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이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감히 가난에 ‘만족’ 하라고 말할 만큼 오만하기도 하다.

실의 지지를 받았다. 현 타이 외무장관은 P.A.D. 지지자다. P.A.D.를 옹호하는 대중 매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비판하는 학자와 사회 활동가들을 마녀사냥했다.

지금 타이에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계급 투쟁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투쟁은 크게 왜곡돼 있다. 2006년 쿠데타를 지지한 ‘노란 셔츠’는 탁신의 ‘타이 락 타이’ 정부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빈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벌인 것을 매우 싫어했다. 그들은 멍청한 타이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스스로 ‘신질서’라고 부르는 있으나마나한 의회를 원한다.

탁신이 쿠데타로 축출된 후, 타이 정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기층에서 민주화 운동 — 붉은 색 셔츠를 입는다 — 이 나타났다. 그들은 탁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이 공화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군부와 P.A.D.가 왕정을 정치에 끌어들이길 결과다.

국왕은 단 한 번도 타이 민주주의 파괴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는 아직도 사람들이 자기앞에 엎드리기를 원한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이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감히 가난에 ‘만족’ 하라고 말할 만큼 오만하기도 하다. 타이 엘리트들은 국왕이 연로한 상황에서 왕정의 정당성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고 있다. 얄친 데 덮친 격으로 타이 대중은 국왕의 아들을 혐오한다.

타이인들은 타이 사회에서 군부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사법과 경찰 제도를 개혁하고, ‘붉은 색 셔츠’ 운동을 힘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왕정도 폐지해야 한다. 타이에서 왕정은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가로막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다.

논설

이명박 정부에게는 위기에 대한 답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 위해 물량 공세를 펴려 한다. 29조 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경기부양 카드”다(〈중앙일보〉).

그러나 상황이 정부 바람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치를 -0.5~-1퍼센트로 잡았다.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가 활로를 뚫기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정부의 계산에 〈중앙일보〉는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29조 원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은 3조 5천억 원밖에 안 된다. 그나마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다.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줄이는 편이다. 635개 상장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지난해에 비해 40퍼센트 줄일 계획이다. 있는 일자리도 줄이면서 ‘저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다.

이렇게 소비자의 압도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이야말로 이명박식 ‘황당’ 개그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뭘 하는지를 알고나 있을까 싶다. 가령, 반환경적 4대강 정비가 녹색 뉴딜이고, 교육에서 경쟁과 시장 논리를 강조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휴먼 뉴딜’이다.

그래도 뉴딜 정책을 실시했던 로즈벨트는 첫 번째 취임 연설에서 은행가들, 금융업자들, 이윤 추구, 자본주의의 이기주의가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MB는 자신을 포함해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보호주의 장벽 세우기에 반대하면서도 (한-EU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력 이동에 대한 장벽은 확실하게 세우고 있다. 정부는 올해 취업 목적의 외국인 입국 허용을 지난해보다 66퍼센트 감축했다.

‘어원췌’ 정권이 ‘한국의 일자리는 한국인에게’ 같은 민족주의 슬로건을 꺼내든 셈이다. 진보진영과 특히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이 위험한 슬로건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이익보다 민족을 앞세우고 노동조합 운동을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사태장악력을 잃고 있다. 그가 TV 토론을 기피하고 대신 선택한 라디오 연설은 “메시지가 식상에 청취율이 떨어지고 시중의 반응도 별반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향신문〉)

한편, 사태의 불확실성은 지배계급 내 쟁투를 낳는다. 박연차 스캔들이 이 정부의 중심 무대가 돼 있다. 노무현과 그 세력의 제거를 위해 꺼내든 검찰의 ‘사정’ 칼날이 야당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이명박 측근과 여당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구정권과 신정권이 모두 비리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이 할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대응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고 저항을 분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공격하며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교라 ‘여론 조작’에 대한 수사 같은 치졸한 수법도 동원된다.

무엇보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사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으며 7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합법’ 파업중인 YTN 노조 노총면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명박 정부의 반동적 공세가 정확히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그것의 성공을 확신해서라기보다는 그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권위주의 통치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설득 없는 강제력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탄압으로만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과 지배자들 자신도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상황은 매우 커다란 투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3만 원

6개월(13개 호) | 1만 5천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레프트21

대중행동을 위한 요구들

경제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황의 골은 더 깊어 가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미치광이 운전수(기업주들)와 무능하고 부패한 교통경찰(각국 정부)의 책임이며, 멋대로 운전하도록 방치하자던 엉터리 신호체계(신자유주의)의 탓이다. 무엇보다 자동차(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다.

모순투성이인 체제 속에서 시달려 온 노동자 서민들은 지금의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현재 각국 정부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려고 안달이다. 재벌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밀바닥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깎아 주려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덩 빈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면서 정부가 투기꾼들에게 온갖 지원을 해대지만,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 노동자들은 집한 채 없이 떠도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 거꾸로 된 체제에서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덩 빈 주택들을 집 없는 서민에게 주고,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재벌들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수백조 원의 잉여금으로 서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하는 요구들은 바로 이처럼 저들의 우선

순위를 뒤집으며 저항과 연대의 결집점이 될 수 있다. 이 요구 자체는 이윤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려면 강력한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이윤보다 삶을 우선하는 이 요구들과 이를 위한 대중투쟁의 논리는 체제의 논리와 충돌한다. 따라서 기업주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국가와 충돌한다.

그럴 때 우리는 체제의 논리를 받아들이 것인가 근본적으로 거부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넘어간다. 그 점에서 이 요구들은 노동자 서민들의 현재 의식과 근본적

변혁을 위한 투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구실을 할 수 있다. 물론 요구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위한 투쟁 속에서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고 시장도 국가도 여기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라는 아만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활동가들은 전환적 요구를 제시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며 이런 요구들을 둘러싼 대중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물가통제, 실질임금 삭감 반대

고물가가 낳은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물가를 통제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고통 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임금 동결 및 삭감 에 반대한다. 회사가 임금 지불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가 기존 임금을 보존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와 고용 안정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 우선해고를 포함해 일체의 해고를 금지하고 정년 단축을 반대해야 한다.

임금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35시간 노동제로 일자리 창출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 35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시급제는 전업·특근 수당을 포함하는 기존의 월급을 보장하는 월급제로 바뀌어야 한다. 공공서비스 확대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보급으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청년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져본 적 없는 청년실업자들은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부도기업의 국유화

부도·파산 위험에 있는 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유기업은 이윤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무려 55퍼센트 정도가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

현행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적어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평균가구소득의 절반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복지제도의 대폭 확대

무상으로, 무상보육, 무상임대주택, 국민연금 급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 탕감, 기초노령연금 적용 대상과 급여 확대, 실업급여 인상과 급여기간 연장·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복지 확대를 위한 비용은 기업주와 정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확대와 재벌잉여금 환수 등으로 마련한다.

부자들을 위한 교육 반대

입시 경쟁은 사교육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국제중·자사고·특목고 등으로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대폭 증액해 중등교육까지 완전한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전체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이하)를 실시해야 한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의 대학 지배도 없애져야 한다.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필수유지업무제도와 주요 시설 점거 금지·정치파업 금지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모든 노동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FTA 반대

FTA는 단지 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와 시장화를 경제 전체에 강요하려는 것이다.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대, 식품안전 위협, 환경파괴, 공공서비스 후퇴 등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및 재국유화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된다. 교육·의료·물·전기·가스·철도·금융·지하철·정유·통신·언론·우편 등은 이윤이 아니라 평범한 대중의 삶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한 부분은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

투기자본 규제

투기자본의 활동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금융위기를 부채질한다. 투기적 수익에 중과세하고 그 세수입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투기를 규제하고, 투기자본을 양성하는 관련 법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정치적·시민적 권리 보장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력 강화, 인터넷·언론 통제 등 민주적 기본권을 가로막는 온갖 법과 제도를 폐지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각종 보안 수사기관을 해체해야 한다. 진정한 배심원제의 도입 등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여성과 소수자 차별 반대

여성·이주자·장애인·동성애자 차별 등 부당하며 운동을 분열시키는 온갖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여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성폭력·성희롱·낙태금지법·간통죄 등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것을 반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출입국과 취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 반대

미국과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 점령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미군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대한 점령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모든 점령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선 안 되지만, 이를 빌미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데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협력하려는 전략 한미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과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파트너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영구 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북한의 위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도 중단해야 한다. 군비증강 예산을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더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핵 에너지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